

2023  
상반기

오늘의 세계경제 • 세계경제 포커스 • KIEP 기초자료

# 현안대응자료 요약 모음집

대한민국의  
선진국 위상 확립을  
선도하는  
대외경제정책 연구기관

KOREA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  
POLICY

**KIEP** 대외경제정책연구원  
Korea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 Policy

## 차례 contents

발간일	제목	저자	
2023.01.12.	국제사회의 주요 쟁점 이슈와 개발협력 정책과제	오지영	01
2023.01.18.	최근 아프리카 지역의 인플레이션 현황 및 전망	한선이 외	02
2023.01.18.	유럽 핵심원자재법(CRMA)의 입법동향과 시사점	조성훈	04
2023.02.03.	다보스 2023: 글로벌 무역과 투자 회복을 위한 과제	김종덕 외	06
2023.02.14.	2022년 녹색기후기금(GCF) 운영현황과 시사점	송지혜 외	08
2023.02.17.	EU '그린딜 산업계획'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	장영욱 외	10
2023.02.20.	2022년 북한의 대외동향 평가 및 시사점	김다울 외	11
2023.03.02.	중남미 내 좌파정부 확산에 따른 정치·경제 환경 변화와 시사점	이승호 외	13
2023.03.06.	제5차 UN 최저개발국 회의(LDC5)의 주요 의제와 정책 시사점	이은석 외	15
2023.03.07.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인도의 대러시아 수입 동향과 시사점	김경훈	16
2023.03.23.	2022년 북중 무역 평가: 경제난의 가중과 위드코로나 전환	최장호 외	17
2023.03.28.	2023년 양회를 통해 본 시진핑 집권 3기 경제운영 전망과 시사점	문지영 외	19
2023.03.29.	EU '그린딜 산업계획' 후속정책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	장영욱 외	21
2023.03.30.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 재집권 이후 이스라엘의 정세 변화와 시사점	이지은	23
2023.04.06.	미국의 대중 반도체 제조시설 수출통제에 따른 중국의 장비 수입 변화 분석	김혁중 외	24
2023.04.18.	2023년 나이지리아 대통령 선거 및 지방선거 결과와 신정부 정책 전망	정민지 외	25
2023.04.24.	중동 주요 국부펀드의 최근 투자 동향 및 시사점	손성현	27
2023.04.27.	'디지털 중국' 추진전략의 주요 내용과 평가	오종혁	29
2023.04.27.	중국 LFP 배터리 공급망 분석 및 시사점	최재희	31
2023.05.03.	한-아세안 연대구상(KASI)의 주요 내용과 대아세안 협력 전망	최인아 외	33
2023.05.04.	USMCA 자동차 원산지 규정 관련 분쟁 판정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	김민성	35
2023.05.09.	일본 기시다 정부의 저출산 대책과 시사점	이형근	37
2023.05.09.	크레딧 스위스 위기 이후 유럽 은행 리스크 평가	오태현	39
2023.05.15.	라오스 경제 위기 가능성 진단 및 시사점	정재완 외	40
2023.05.16.	2023년 세계경제 전망(업데이트)	안성배	42
2023.05.16.	최근 한국의 대(對)아세안 교역·투자 분석과 시사점	이재호	44
2023.05.16.	최저개발국(LDCs) 현황과 지역별 협력 방안: GNI, HAI, EVI 지수를 중심으로	김소은 외	46
2023.05.23.	인도 주가지수 상승의 주요 배경 및 시사점	김도연	48
2023.05.30.	2023년 제48차 G7 정상회의의 주요 논의 결과와 시사점	김승현	50
2023.05.31.	중국의 '글로벌 발전 이니셔티브' 추진 현황과 전망	김홍원	52
2023.06.02.	파키스탄의 복합위기와 시사점	김경훈	53
2023.06.08.	러-우 전쟁 이후 우리나라의 대중동 원유 수입 비중 변화와 시사점	유광호	54
2023.06.12.	한-태평양양도서국 정상회의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	최인아 외	56
2023.06.12.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국제사회의 인도적 지원 동향과 시사점	박차미 외	58
2023.06.19.	대선 이후 튀르키예 경제 주요 현안 및 향후 전망	이철원	60
2023.06.27.	중국의 반도체 국산화 추진 현황과 시사점	오종혁	62



# 국제사회의 주요 젠더 이슈와 개발협력 정책과제

오지영 국제개발협력센터 전략평가팀 부연구위원 (gyoh@kiep.go.kr, Tel: 044-414-1270)

◎ 코로나19 이후 다양한 형태의 사회경제적 불평등 문제가 대두되면서 취약계층 지원과 젠더 이슈 해소에 대한 요구가 더욱 높아지고 있으며, 국제사회는 이에 대응하는 다양한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있음.

- 세계무역기구(WTO)는 지속가능한 무역과 회복을 위한 성평등에 대한 국제 회의를 2022년에 개최하고, 국제통화기금(IMF)은 회원국의 성평등 달성을 돕기 위한 젠더 주류화 전략을 2022년에 처음 마련하는 등 다수의 국제기구에서 젠더 이슈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음.
- 독일의 경우 2022년 연방경제협력부(BMZ)에서 ‘페미니스트 개발정책(Feminist development policy)’을 발표하며 구조적 불평등 해소를 포함한 다양한 젠더 이슈를 중요 개발협력 과제로 채택함.
-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는 남성보다 여성에게 더 큰 타격을 주었으며, 나아가 디지털화와 같은 국제적 흐름에 따라 젠더 이슈가 다면화되고 있음.

◎ 성평등은 새천년개발목표(MDGs)에 이어 지속가능개발목표(SDGs)의 일환으로, 지난 20년간 젠더 이슈에 대한 국제사회의 개발협력 노력에도 불구하고 2030년 목표를 달성하기에는 그 성과가 아직 미흡한 것으로 나타남.

- 성평등 개발과제에 대한 이행성과는 꾸준히 제고되고 있으나 지역별·분야별 달성도가 다르며, 코로나19 타격으로 인해 현재 2030년 목표를 달성하기 어려운 실정임.
- 국제개발협력(ODA) 사업 중 성평등과 관련된 사업의 비중과 규모는 꾸준히 늘고 있으나, 그중 성평등이 핵심 목표인 사업은 규모가 늘고 있지 않음.

◎ 젠더 문제는 범분야 이슈로서 성평등 ODA의 양적 확대뿐만 아니라 개발협력 전반에 걸친 젠더 인식(gender consciousness) 제고를 통한 통합적 접근이 필요함.

- 취약계층 지원 및 성평등 개선을 위해 △젠더 이슈에 대한 범분야적 및 통합적 접근 △데이터 확보를 위한 통계 시스템/도구 개발 및 투자 확대 △지역별·분야별 특성에 맞춘 지원형태 다각화 등 국제사회의 개발협력 정책과제를 도출할 수 있음.



# 최근 아프리카 지역의 인플레이션 현황 및 전망

**한선이** 세계지역연구센터 아프리카중동팀 부연구위원 (seonihan@kiep.go.kr, 044-414-1345)  
**김예진** 세계지역연구센터 아프리카중동팀 전문연구원 (kimyj@kiep.go.kr, 044-414-1116)  
**정민지** 세계지역연구센터 아프리카중동팀 전문연구원 (mjjeong@kiep.go.kr, 044-414-1225)  
**박규태** 세계지역연구센터 아프리카중동팀 연구원 (ktpark@kiep.go.kr, 044-414-1293)

- ◎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원자재 및 식량 가격이 급등하면서 아프리카에서도 인플레이션이 심화되고 있으며, 인플레이션 항목 중 특히 식량 및 수입 물가 상승의 비중이 높음.
  - 2022년 아프리카 내 일부 원자재 수출국을 제외한 대부분의 국가에서 물가상승률이 높아져 1/3 이상의 국가에서 두 자릿수를 기록하였으며, 최근 10년간 인플레이션이 가장 심화됨.
  - 2022년 특히 소비 바스켓 내 비중이 큰 식량 가격과 수입물가 상승이 인플레이션을 견인함.
- ◎ 아프리카 지역의 인플레이션은 통화정책, 기후변화, 분쟁 등과 같은 국내 요인에 국제 식량 및 에너지 가격 상승 등의 대외 요인이 결합하여 심화되고 있음.
  - 최근 들어 아프리카 지역 인플레이션에서 글로벌 식량 및 에너지 가격 변동 등 대외 요인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으며, 지역별·국가별 특성에 따라 다양한 물가상승 요인의 영향을 받고 있음.
  - 아프리카 지역 인플레이션은 2023년 하반기부터 점차 안정화될 것으로 보이나, 전 세계적인 긴축 강화와 달러 강세 기조가 지속되면서 아프리카에서 자본 유출이 심화되고 채무 부담이 큰 폭으로 커지고 있어 부채위기 우려가 높아지고 있음.
- ◎ 인플레이션에 대응하기 위해 각국에서 금리를 상향 조정하고 물가안정 정책을 펼치고 있으나, 물가상승이 지속되면서 식량 불안 인구와 빈곤층이 증가하고 있어 사회 불안이 증대할 우려가 있음.
  - 팬데믹 이후 아프리카의 경기회복이 다른 지역에 비해 늦어지는 가운데 여러 국가에서 인플레이션 상황을 주시하면서 금리를 인상하고 있으며, 물가 안정정책을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있으나 재정 여력이 부족한 상황임.
  - 인플레이션 심화에 따른 가계의 실질임금 감소 및 구매력 저하로 빈곤층과 식량 불안 인구가 증가하고 있고, 생계비 증가에 대한 불만으로 시위가 발생하고 있어 사회 불안의 우려가 높아지고 있음.



## 최근 아프리카 지역의 인플레이션 현황 및 전망

- ◎ 한국 정부와 기업은 아프리카의 경제상황 변화와 정치적·사회적 불안 발생 가능성에 대한 대응전략 및 위험 관리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으며, 세계경제의 파편화에 따라 한국도 외교 및 경제협력 다변화를 목표로 아프리카와의 협력 확대가 필요함.
  - 한국은 국제사회에 대한 기여 차원에서 아프리카의 식량위기 극복을 지원하기 위해 식량 원조와 기후변화 및 식량안보 관련 개발협력을 확대하고, 세계경제의 파편화와 그린 전환 가속화 움직임에 따라 외교 및 경제협력 다변화를 위해 다양한 분야에서 아프리카와의 협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유럽 핵심원자재법(CRMA)의 입법동향과 시사점

조성훈 경제안보전략실 경제안보팀 부연구위원 (scho@kiep.go.kr, 044-414-1437)

- ◎ EU는 최근 코로나19 및 미-중 갈등, 러-우 전쟁 등 역내 공급망 불안정성이 확대됨에 따라 2022년 「핵심원자재법(CRMA: Critical Raw Material Act)」의 입법을 추진함.

  - CRMA 입법은 2008년 ‘원자재 이니셔티브(Raw Materials Initiative)’에서 시작하여 2020년 ‘핵심원자재복원력계획(Critical Raw Materials Resilience)’으로 이어지는 정책적 논의의 연장선상에 있으며, 최근의 공급망 교란 충격이 입법을 가속화함.
- ◎ 해당 법안의 영향평가 요구서에서 여섯 가지 주요 정책과제와 네 가지의 정책목표를 공개함.

  - EU의 당면과제는 △ 공급망 다양성 부족 △ 역내 공급능력 개발·투자 미흡 △ 모니터링 및 위험관리 능력 취약 △ 사회 및 환경에 미치는 잠재적 위험 △ 기존 규제 프레임 활용의 한계 △ 연구 및 혁신 부족 등임.
  - 해당 법안을 통해 이루고자 하는 정책목표는 △ 핵심 원자재의 우선순위 및 목표 설정 △ 모니터링, 위험관리 및 거버넌스 개선 △ 핵심 원자재 공급망 가치사슬 강화 △ 역내 단일시장 전체에서 지속가능한 경쟁환경 조성 등으로 요약할 수 있음.
- ◎ EU는 CRMA를 통해 향후 공급망 불확실성을 최소화하면서 탄소중립 경제로 이행하고자 하며, 역내 조달 비율 및 재활용률을 높이고, 역외 수입 다변화를 통한 국제협력을 강화할 것으로 예측됨.

  - 지금까지 정책의 발전과정을 고려했을 때 향후 지리적 차별요소 조항이 법안에 담길 가능성은 적으며, EU 입법과정에서의 이해조정 및 타협 과정을 고려할 때 법안 초안 공개 후에도 전략적 대응이 가능할 전망이다.
  - 부정적 파급효과가 존재할 가능성에 대해 긴밀히 모니터링하는 동시에, EU와 미래 지향적 파트너십을 강화하기 위한 논의가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 ◎ 한국은 전략적 다양성(strategic diversity)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EU와 파트너십을 강화하는 한편, 공급망의 체질을 개선하기 위한 다각적 대응이 필요함.

## 유럽 핵심원자재법(CRMA)의 입법동향과 시사점

- ‘광물안보파트너십(Mineral Security Partnership)’, ‘유럽원자재동맹(European Raw Materials Alliance)’과 같은 국제협력 기회에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함.
- 원스톱 중앙정보 관리 시스템을 구축한 후 핵심 원자재의 선정기준 및 중장기 공급망 관리 방향을 제시하여 정책적 투명성을 높일 필요가 있음.
- 공급망 위기에 노출된 중소기업을 파악한 후, 정부 차원에서 △ 위험비용 헷징(hedging) 방안 마련 △ 자금 지원 및 시스템 개선 노하우 제공 등의 지원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공급망 다각화를 가능하게 하는 기술을 보유한 진입기업을 정책적으로 지원하여 공급망의 근본적 체질 변화를 도모해야 함.



# 다보스 2023: 글로벌 무역과 투자 회복을 위한 과제

김종덕 무역통상실장 (jongduk.kim@kiep.go.kr, Tel: 044-414-1181)  
 이규엽 무역통상실 신통상전략팀장 (kylee@kiep.go.kr, Tel: 044-414-1233)  
 구경현 무역통상실 무역투자정책팀장 (khkoo@kiep.go.kr, Tel: 044-414-1271)  
 이천기 무역통상실 무역협정팀장 (leeck@kiep.go.kr, Tel: 044-414-1361)  
 김현수 무역통상실 신통상전략팀 부연구위원 (kimhs@kiep.go.kr, Tel: 044-414-1087)  
 이주관 무역통상실 신통상전략팀 부연구위원 (jklee@kiep.go.kr, Tel: 044-414-1089)

## ◎ 다보스 2023은 ‘분절화된 세계에서의 협력(Cooperation in a Fragmented World)’을 주제로 회복력 있고 지속가능한 미래로 나아가는 방안에 대해 화두를 던짐.

- 2023년 세계 무역성장률을 3.4%에서 1.0%로 하향 조정(WTO)하였고, 2022년 2/4분기 세계 해외직접투자 실적은 전기대비 31% 감소한 것으로 집계되었으며, 2023년 1월 수정된 전망치를 제시한 세계은행은 2023년 전망을 지난해 말 발표한 3.0%에서 1.7%로 하향 조정함.
- 다보스 2023 세계경제 포럼은 세계 무역과 경제에 관한 우울한 전망하에서 포용과 지속 성장을 위한 무역 및 투자의 내러티브(narrative)를 재조명하고, 저성장세가 장기화되고 있는 세계 무역과 투자를 회복하기 위한 국제적 정책 공조를 강조함.

## ◎ 현재 무역과 해외투자 증가세 둔화의 이면에는 세계경제의 구조적·정치적 갈등관계가 복합적으로 내재되어 있는바, 국가간 신뢰회복과 협력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음.

- 코로나19 위기 이후에 나타난 세계경제의 위축과 이에 대응하는 각국의 중상주의적 보호무역 기조의 심화 등이 무역과 투자 감소의 원인으로 지목됨.
- 아울러 현재 무역과 투자의 저성장 기조 장기화의 이면에는 신흥시장의 급속한 성장에 따른 국가간 경쟁의 심화, GVC 성장세 둔화에 따른 교역재 수요 감소, 불평등 확대가 촉발한 세계화에 대한 불만을 각국 정부가 보호주의적 통상정책으로 표출한 결과로 이해
- 경기하락으로 인한 세계수요 감소, 보호주의적 정책 증가, 수출 및 투자 감소, 성장률 하락으로 이어지는 악순환 구조에서 벗어나기 위해 국가간 신뢰회복과 협력이 중요한 시기임.

## ◎ 국제사회에서 무역과 투자에 대한 국제적인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개방이 가져다주는 혜택에 대한 새로운 근거를 제시하고, 갈등요인에 대해 협력과 논의가 지속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임.



## 다보스 2023: 글로벌 무역과 투자 회복을 위한 과제

- 무역과 투자가 부진한 원인을 다각적인 차원에서 재조명하고, 불평등과 같이 이미 알려진 이슈를 다자 차원의 의제로 삼아 공동의 해결책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보호주의적 산업정책 및 보조금 문제와 함께 새로운 갈등요인으로 부상하고 있는 비무역가치(기후변화, 국가안보 등)와 관련하여 일방조치에 대한 다자 차원의 끈기 있는 논의와 협력이 필요함.

◎ 세계적인 무역과 투자의 재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경제적 위상에 걸맞은 통상정책의 협력 범위 확대와 무역자유화에 따른 국내 보완대책의 지속적인 정비 등은 한국이 지속적으로 고민해야 할 정책 과제임.

- 지속발전 가능성, 포용성 등 현재 국제사회의 고민과 이슈에 대해 우리 입장을 담은 적극적인 제안이 필요함.
- 디지털, 환경, 노동 등 신통상 이슈와 관련된 통상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기술, 인프라, 인력 교류 등 교역상대국의 정책 수요를 반영할 수 있는 방향으로 협력의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음.
- 공급망·디지털·기후변화에 맞춘 ODA 사업은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는 정책이라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평가가 가능하며, 무역과 투자를 확대하기 위한 정책의 효과를 높인다는 차원에서 통상정책과 ODA 정책 간 연계성을 강화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음.



# 2022년 녹색기후기금(GCF) 운영현황과 시사점

송지혜 국제개발협력센터 정책분석팀 전문연구원 (jhsong@kiep.go.kr, 044-414-1074)

이예림 국제개발협력센터 전략평가팀 연구원 (yrlee@kiep.go.kr, 044-414-1068)

- ◎ [연구 배경] UNFCCC의 재정 메커니즘 운영주체로 2013년 공식 출범한 녹색기후기금(GCF)은 글로벌 팬데믹으로 원활하지 못했던 이사회 논의를 2022년 정상화하며 정책과 사업 승인, 차기 자원보충 마련 등 다수 주제에서 진전을 이룸.

  - GCF의 주요 사안을 결정하는 이사회는 2022년 총 네 차례의 이사회(제31차~제34차)를 개최하여 정책 채택, 사업승인, 기구인증, 성과평가, 신규 전략계획, 자원보충 등을 다룸.
- ◎ [GCF 자원 및 포트폴리오 현황] 2022년 12월 기준, 누계 209건 사업(114억 달러 규모)이 승인되었으며, 이를 통해 24억 tCO<sub>2</sub>e의 온실가스를 감축하고 6억 7,600만 명이 직·간접적 수혜를 받을 것으로 예상됨.

  - 공공과 민간 부문의 사업 비율 83:17, 감축과 적응 사업 비율 51:49, 국제접근기구와 직접 접근기구 사업 비율 82:18이며, 적응사업의 65%가 취약국을 대상으로 함으로써, GCF 1기('20~'23년) 목표치 달성에 근접함.
- ◎ [쟁점 사항] 사업 운영과 정책 협의 및 채택, GCF 2기('24~'27년) 자원보충과 관련하여 진전 및 쟁점 사항은 다음과 같음.

  - [사업운영] 민간이 참여하는 금융사업 승인과 개발은행의 재인증을 둘러싸고 선진국과 개도국간 이견이 존재하였으며, 한편 제34차 이사회('22년 10월)에서 KDB 산업은행이 제안한 사업이 승인되어 우리나라 인증기구 최초로 GCF 본사업 개시를 앞두고 있음.
  - [정책 및 성과 관리] 민간부문 전략, 적응활동 지원 지침 등, 정책 및 전략 문서가 채택되어 그간 문제점으로 지적되던 정책간극(policy gap)이 상당 부분 해소됨.
  - [재원] 차기 GCF 운영('24~'27년)을 위한 일정과 절차가 합의되어 자원보충 절차가 공식 개시되었으나, 일부 선진국의 GCF 1기('20~'23년) 공약 미이행으로 사업재원 부족이 발생
- ◎ [시사점] 2022년 협의된 정책방향과 전략계획 내용을 토대로 향후 기후변화 적응 지원활동에 보다 많은 관심이 집중되며, GCF와 협력을 위해 우리나라 인증기구의 적응 지원활동 개발과 비(非)인증기구의 참여방안 모색이 필요함.

## 2022년 녹색기후기금(GCF) 운영현황과 시사점

- GCF와의 협력을 확대하기 위해 개도국의 수요에 부합하는 동시에 국내 기구·기업의 비교우위를 활용할 수 있는 적응 분야 지원활동을 보다 적극적으로 개발할 필요가 있음.
- 인증전략에 따라 향후 GCF의 기구인증은 개도국의 직접접근기구를 중심으로 이루어질 전망이므로, 우리나라는 비(非)인증기구를 통한 GCF 협력 방식을 보다 적극적으로 모색할 필요가 있음.
- 장기적으로는 차기 GCF 자원조성과 UNFCCC에서 논의 중인 신규 기후자원 조성(NCQG) 등, 유관 의제를 아우르는 통합적·전략적 기후자원 조성방안과 협상전략 마련 또한 검토할 필요가 있음.



# EU ‘그린딜 산업계획’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

**장영욱** 세계지역연구센터 유럽팀장 (yojang@kiep.go.kr, Tel: 044-414-1221)

**오태현** 세계지역연구센터 유럽팀 선임연구원 (asroc101@kiep.go.kr, Tel: 044-414-1159)

**임유진** 세계지역연구센터 유럽팀 전문연구원 (yjlim@kiep.go.kr, Tel: 044-414-1064)

- ◎ EU 집행위원회는 2023년 2월 1일 ‘그린딜 산업계획(Green Deal Industrial Plan)’을 제안함.
  - 그린딜 산업계획은 2019년 제안된 유럽 그린딜의 일환으로, 2050년 기후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친환경 산업 육성정책을 주요 내용으로 함.
  -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 일본 그린성장전략, 인도 생산연계 인센티브 제도 등 주요국의 친환경 산업 육성정책에 대응하기 위해 유럽 자체적인 친환경 산업전략을 제시함.
- ◎ 그린딜 산업계획은 ① 규제환경 개선 ② 자금조달 원활화 ③ 숙련인력 역량 강화 ④ 교역 활성화의 네 가지 수단을 통해 친환경 산업 육성을 촉진할 계획임.
  - [규제환경 개선] 기후중립 전환과정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넷제로산업법」, 「핵심원자재법」, 「대체연료인프라규정」 등을 통해 친환경 산업 관련 규제 완화를 추진함.
  - [자금조달 원활화] 청정기술에 대한 투자와 지원을 장려하기 위해 개별 회원국 차원, EU 및 민간 차원에서의 자원 접근성을 개선하며, 이를 위해 유럽국부펀드를 신설함.
  - [숙련인력 역량 강화] 녹색전환에 필요한 숙련인력 양성 및 역량 강화를 위해 △넷제로 산업 아카데미 설치 △회원국·제3국 간 상호 자격인정 △공공·민간 자금 지원 등을 추진함.
  - [교역 활성화] 공정한 경쟁과 무역개방 원칙 아래 친환경 전환에 대한 ‘핵심광물 클럽’, ‘넷제로 산업 파트너십’ 등의 국제협력을 추진하며, 불공정무역을 방지하기 위해 「역외보조금규정」을 운영함.
- ◎ 주요국의 친환경 산업 육성정책에 유럽이 가세함으로써 향후 친환경 산업 및 기술 시장 선점 경쟁이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에 대한 선제적인 대비가 필요함.
  - 그린딜 산업계획은 현재 계획 제안 단계로 구체적인 정책 내용 및 입법안은 아직 제시되지 않았으나, EU 특별정상회의 결과로 미루어볼 때 관련 핵심 규정의 입법이 연내 추진될 것으로 전망됨.
  - 미국, 일본, 인도, 중국에 이어 유럽도 친환경 산업 육성정책을 제시하면서 관련 산업과 기술 시장 선점 경쟁이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됨.
  - 국내 수출 기업 및 현지 진출 기업에 대한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관련 입법안 동향 파악 및 선제적 대응방안 마련이 필요함.



# 2022년 북한의 대외동향 평가 및 시사점

**김다울** 경제안보전략실 통일국제협력팀 부연구위원 (dwk129@kiep.go.kr, Tel: 044-414-1070)

**이정균** 경제안보전략실 통일국제협력팀 전문연구원 (jkrhee@kiep.go.kr, Tel: 044-414-1084)

◎ [대내외 환경 및 전략] 북한은 미·중 경쟁,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동북아의 정치경제 질서가 분화되는 국제정세를 ‘신냉전’으로 규정하고, 다방면에서 대외관계를 전략적으로 활용하고자 하였음.

- 미국에 대해 강대강, 정면승부 기조를 유지하는 한편 중국·러시아와는 전통적 친선협조, 전략적 관계 강화를 통해 우방국의 외교적 지지를 획득함.
- 북핵·미사일 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합의가 이루어지기 어려운 상황에서 핵무력을 법제화하고 미사일 실험을 지속하고 있음.
- 가중되는 경제난을 타개하기 위해 코로나19 확산에도 불구하고 북·중, 북·러 육로무역 등 경제협력 재개 논의를 확대하는 한편, 대내적으로는 경제 정비·보강을 목표로 국가통제를 강화하고 있음.

◎ [주요국 대외 동향] 중국, 러시아와는 코로나19로 중단되었던 경제협력을 재개하고 전통적 친선협조, 전략적 관계를 강화하고 있으며, 미국, 일본에 대해서는 북핵 및 미사일 위협 고조에 따라 한·미, 한·미·일 안보협력이 강화되면서 북한이 이에 반발하는 양상이 연쇄적으로 전개됨.

- [북·중] 중국은 북한 교류·협력 문제와 북핵 문제를 분리하여 대응하는 대북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북한 또한 경제적·외교적 측면에서 이에 적극 호응하며 전략적 연대를 지속하고 있음.
- [북·러] 러시아와는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해 북한이 지지하는 한편, 방역정책 완화를 계기로 경제협력 재개 논의가 대폭 확대되었으며, 외교적 차원의 전략적 연대 또한 강화됨.
- [북·미] 미국은 대북 대화 채널을 열어놓되 한국에 대한 확장억제 공약 및 한·미·일 공조 강화, 대북제재 강화 등 강경한 대북정책을 이어갔으며, 북한 역시 대미 강대강 기조를 이어가며 무력도발을 지속하고 있음.
- [북·일] 북한의 미사일이 일본 상공을 통과하고 ICBM이 일본 배타적경제수역에 낙하하는 등 북핵·미사일 위협이 고조됨에 따라 일본은 대외적으로 한·미·일 공조를 강화하는 한편, 대내적으로 방위력 강화를 추진하고 있음.



## 2022년 북한의 대외동향 평가 및 시사점

◎ [전망 및 시사점] 2023년 북한은 방역정책을 완화하고 중국 및 러시아와 경제협력을 강화하면서 포스트 코로나에 대비하는 한편, 미국과 한국에 대해서는 강경 노선을 유지하며 국방력 강화에 힘쓸 것으로 전망됨.

- 우리 정부는 북한의 외화수급 및 경제상황에 대한 모니터링, 북한의 가상화폐 탈취 방지수단 강구,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 고조에 대한 대비, 북핵·미사일 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지 확보가 필요할 것임.



## 중남미 내 좌파정부 확산에 따른 정치·경제 환경 변화와 시사점

**이승호** 세계지역연구센터 미주팀 부연구위원 (seungholee@kiep.go.kr, Tel: 044-414-1211)  
**홍성우** 세계지역연구센터 미주팀 부연구위원 (swhong@kiep.go.kr, Tel: 044-414-1150)  
**김진오** 세계지역연구센터 미주팀 선임연구원 (jokim@kiep.go.kr, Tel: 044-414-1085)  
**박미숙** 세계지역연구센터 미주팀 전문연구원 (misookp@kiep.go.kr, Tel: 044-414-1105)

### ◎ 최근 5년 사이 중남미에서 좌파정부가 연이어 창출되고 있음.

- 2000년대 중남미에서 좌파 또는 중도좌파 성향의 정부가 연쇄적으로 들어섰던 이른바 ‘핑크 타이드(pink tide)’ 시기를 연상케 하며, 이러한 이유로 일각에서는 현 상황을 ‘제2의 핑크 타이드’라 명명함.
- 역내 경제규모 상위 6개국인 멕시코, 아르헨티나, 페루, 칠레, 콜롬비아, 브라질에서 연이어 좌파 또는 중도좌파 성향의 정부가 창출되었고, 멕시코나 콜롬비아와 같이 △우파가 한 번도 정권을 내준 적 없고 △친미적 성향이 강하며 △유권자의 성향이 상대적으로 보수적인 국가에서도 좌파정부가 들어섬.
- 베네수엘라와 니카라과는 사실상 권위주의 체제로 이행한 상황에서 민주적 절차가 일부 지켜지지 않은 가운데 좌파 대통령이 연임함.

### ◎ 중남미 내 좌파정부 확산은 전임 정부의 경제적 성과에 대한 불만과 함께 불평등 및 빈곤 심화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고 볼 수 있음.

### ◎ 좌파정부 집권에 따른 주요국의 정치·경제 환경 변화는 다음과 같음.

- [경제] 대부분의 좌파정부가 경제 전반에서 ‘정부 역할 강화’를 경제정책 기조로 설정하고, 가능한 범위에서 불평등 및 빈곤 문제 해결을 모색하고 있음.
- [산업] 세계 산업구조 및 공급망 재편과 탄소중립 목표 실현 과정에서 수혜가 기대되는 광물자원 개발이나 신산업 육성을 위한 정부의 계획이 구체화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정부의 역할을 강조함.
- [정치] 대부분의 좌파 집권 국가에서 여당이 의회에서 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국정과제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가중되는 정치 양극화 속에서도 여야관계 제고가 필수적임.
- [외교] 역내 좌파정부간 연대가 강화될 것으로 보이며, 미국 및 중국과의 외교관계가 일부 재설정될 가능성이 있지만, 급진적인 변화가 관찰되지는 않을 전망이다.

## 중남미 내 좌파정부 확산에 따른 정치·경제 환경 변화와 시사점

- 중남미에서 최근 5년 사이 연이어 들어선 좌파정부의 재집권 여부는 여러 제약 속에서 불평등 및 빈곤 문제를 완화할 수 있느냐에 좌우될 것으로 보임.

- ◎ 우리 정부는 좌파정부가 집권한 중남미 자원부국에 대한 투자와 협력에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하며, 이와 더불어 좌파정부 확산세로 인해 역내에서 전개되는 미·중 경쟁의 양상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추적할 필요가 있음.





## 제5차 UN 최저개발국 회의(LDC5)의 주요 의제와 정책 시사점

**이은석** 국제개발협력센터 전략평가팀 부연구위원 (eslee@kiep.go.kr, 044-414-1198)

**유애라** 국제개발협력센터 정책분석팀 전문연구위원 (ailayoo@kiep.go.kr, 044-414-1239)

- ◎ 제5차 UN 최저개발국 회의(LDC5)가 2023년 3월 5~9일 카타르 도하에서 개최될 예정임.
  - 1981년 이후 10년 주기로 개최되고 있는 UN 최저개발국 회의는 최저개발국(LDC)의 빈곤 퇴치 및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국제사회의 지원 방향과 협력 수단을 논의하는 대표적인 고위급 개발회의임.
  - 이번 회의는 코로나19로 인해 기존 주기에서 2년 지연되어 개최되며, 국제기구와 협력국 외에도 민간부문과 시민사회, 청년층 등 다양한 개발 주체가 참여할 예정임.
- ◎ 이번 회의는 2022년 3월 기 발표된 ‘도하행동계획(DPoA)’의 이행 로드맵을 수립하고, 팬데믹 이후 LDC의 회복과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이행 가속화를 위한 국제사회의 지원 의지를 재확인하는 계기가 될 것임.
  - DPoA는 지난 이스탄불행동계획(IPoA, 2011~20년) 이행 성과 및 코로나19 이후 LDC가 직면한 위기 진단을 바탕으로 향후 10년(2022~31년)간의 개발전략과 지원 방향을 담은 포괄적인 프로그램임.
  - 특히 SDGs 달성 기한인 2030년을 앞두고 전염병, 기후변화, 분쟁, 식량·에너지 위기 등 다차원적인 복합위기하에서 LDC의 구조적 취약성을 개선하고 SDGs 달성을 지원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합의 형성 및 자원조달 방안 모색에 중점을 둘 것으로 예상됨.
- ◎ 우리나라는 LDC5를 계기로 그간의 최저개발국 지원 성과를 검토하고, 주요 대외정책과 연계하여 보다 체계적인 협력방안을 수립할 필요가 있음.
  - LDC5의 핵심 의제와 DPoA는 기후위기 대응 선도와 과학기술 혁신 및 디지털 전환 지원 등에 중점을 두고 있는 우리나라의 주요 ODA 정책 방향과 일치하는바, 이를 기반으로 LDC5에서 관련 국제 논의를 주도하고 협력방안을 모색해야 함.
  - 특히 정부의 대아프리카 협력 강화방침 등 주요 대외정책과 연계하여 지역별로 전략적 지원 방향을 수립하는 차별화된 접근이 요구됨.
  - 아시아 지역에 집중되어온 LDC 협력을 타 지역으로 확대하고, 범위가 넓은 아프리카 및 태평양도서국을 대상으로 소지역 전략을 수립하여 효율적인 지원방안을 수립할 필요가 있음.



#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인도의 대러시아 수입 동향과 시사점

김경훈 세계지역연구센터 인도남아시아팀 부연구위원 (kimpolecon@kiep.go.kr, 044-414-1263)

- ◎ 2022년 인도의 대러시아 수입이 전년대비 4.4배 증가하며 러시아가 인도의 21위 수입대상국에서 6위 수입대상국으로 급부상함.
  - 인도의 대러시아 주요 수입 품목은 원유, 화학비료, 해바라기씨유로, 생활물가 및 핵심 산업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3F(Fuel, Fertilizer, Food) 품목임.
  -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서방의 대러시아 에너지 수입제재로 인해 가격이 대폭 하락한 러시아산 원유를 인도에서 대거 수입함.
  - 식량안보 관련 품목은 수입제재 대상이 아니나, 서방국가가 대러시아 수입에 대한 물리적·심리적 장벽에 직면한 가운데 인도는 상대적으로 저렴하고 물량이 풍부한 러시아산 식용유와 비료 수입을 확대함.
  - 러시아를 중심으로 한 인도의 가격우선 수입전략이 거시경제 안정에 기여한 것으로 분석됨.
- ◎ 인도정부는 러시아로부터 주요 품목의 수입을 당분간 지속하겠다는 입장을 유지하는 동시에 서방국가와의 관계도 강화하려는 다자동맹주의 전략을 추진하고 있음.
  - 일부 해외 언론이 인도의 대러시아 제재 불참을 비판하고 있으나, 인도정부는 자국 경제 안정을 위해 상대적으로 가격이 낮은 러시아산 제품에 대한 수입 확대가 불가피하다고 주장함.
  - 주요 서방국가 정부는 인도의 대러시아 수입에 대한 비판을 자제하고 있으며, 인도와의 경제·안보 관계를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
  - 인도정부는 서방국가와의 양자간 FTA 및 국제 기술협력과 4자 안보대화,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 등 다자간 협력체를 통해 다양한 외교 노선의 국가와 관계를 강화하는 전략을 추진하고 있음.
- ◎ 우리 정부와 기업은 인도의 대외경제 및 외교정책의 변화를 예의주시하고 전략 수립에 반영할 필요가 있음.
  - 대규모 에너지 및 식량 교역 국가인 인도가 해당 분야에서 통상 및 외교 정책을 조정할 경우 글로벌 자원가격과 우리나라 물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관련 동향을 지속해서 관찰할 필요가 있음.



## 2022년 북중 무역 평가: 경제난의 가중과 워드코로나 전환

**최장호** 경제안보전략실 통일국제협력팀장 (choi.j@kiep.go.kr, Tel: 044-414-1152)

**최유정** 경제안보전략실 통일국제협력팀 전문연구원 (choiyj@kiep.go.kr, Tel: 044-414-1187)

◎ 북한은 가중되는 경제난을 타개하기 위해 2022년 하반기부터 워드코로나 전환을 시도하고 있음.

- 대규모 아사자 보도, 식량 수입량 증가 등 식량 수급이 원활하지 않은 징후가 관찰되는 가운데, 북한은 대내적으로 사회적·경제적 통제를 강화하고 농업 증산을 강조하면서 위기에 대응하고 있으며, 대외적으로는 국경봉쇄를 완화하고 있음.

- 대내 코로나19 확산(2022. 5) 이후 워드코로나 전환(2022년 하반기)의 일환으로 수입 화물의 검역·통관 시간을 단축(2022. 6)하였으며, 수입 경로를 해상 운송, 화물 열차, 화물 트럭으로 다양화하고 있음.

◎ 워드코로나의 영향으로 대중 무역은 10억 2,776만 달러로 2021년 대비 223.2% 증가하였으나, 국지적인 식량난 발생으로 어려움이 지속되는 등 아직까지 경제난을 타개하기에 충분한 수준은 아님.

- 2022년 대중 수입은 8억 9,335만 달러로 2021년 2억 6,016만 달러 대비 243.4% 증가하였고, 대중 수출은 1억 3,441만 달러로 2021년의 5,787만 달러 대비 132.2% 증가하였음.

- 다만 2022년 북중 무역 규모는 2019년(코로나19 국경봉쇄 직전 해)에 비해서는 여전히 63.1% 감소한 수준이어서 국경봉쇄로 인한 물자 부족 문제가 완전히 해소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상황임.

- 화물 열차 재개와 함께 수입 품목이 다양해지면서 다양한 산업 원부자재 조달, 주민들의 소비품 다양화에 긍정적으로 기여한 것으로 평가됨.

◎ 2023년에는 워드코로나 일환으로 단둥·신의주 구간에서도 화물 트럭 운행 재개를 시도할 것으로 보이며, 그 영향으로 북한의 수입은 크게 증가하겠으나 수출은 소폭 증가에 그칠 것으로 전망됨.

- UN 제재는 북한의 수출에, 코로나19 국경봉쇄는 북한의 수입에 영향을 미치고 있어 워드코로나 전환 시 북한의 수입이 확대될 것으로 보임.



## 2022년 북중 무역 평가: 경제난의 가중과 위드코로나 전환

- 2023년 북한의 수입 증가는 민간 소비가 주도할 개연성이 큰데, 이는 위드코로나 전환으로 시장 통제가 완화되었기 때문임.

- ◎ 향후 북중 무역이 정상화된 이후에는 중국의 역할론이 부상하면서 미중 갈등 문제가 한반도 이슈와 직접적으로 연계될 수 있으므로 우리 정부의 입장 마련이 필요함.



# 2023년 양회를 통해 본 시진핑 집권 3기 경제운영 전망과 시사점

**문지영** 세계지역연구센터 중국경제통상팀 부연구위원 (morganmoon@kiep.go.kr, Tel: 044-414-1189)  
**허재철** 세계지역연구센터 중국지역전략팀 부연구위원 (jcheo@kiep.go.kr, Tel: 044-414-1042)  
**박민숙** 세계지역연구센터 중국경제통상팀 전문연구원 (mspark@kiep.go.kr, Tel: 044-414-1511)  
**오중혁** 세계지역연구센터 중국경제통상팀 전문연구원 (ojh@kiep.go.kr, Tel: 044-414-1286)  
**김영선** 세계지역연구센터 중국경제통상팀 전문연구원 (youngsun@kiep.go.kr, Tel: 044-414-1272)

- ◎ 2023년은 시진핑 정부 3기가 정식 출범하는 해이자 14차 5개년 계획을 실행하는 세 번째 해로서, 이번 양회에서 중국정부는 경제정책 운영방침과 함께 시진핑 3기를 이끌어갈 정부조직 및 인사를 발표함.
  - 미중 갈등의 심화와 글로벌 경제 블록화로 확대되는 대외경제 불확실성에 대응하여 중국정부는 ‘안정적 성장’, ‘발전과 안보의 균형’, ‘내수 증진’에 중점을 두어 거시경제를 운영할 방침임.
  - 중국은 과학기술부 개편, 중앙과학기술위원회 신설, 국가금융감독관리총국 신설 등 조직개편을 통해 중장기 발전 전략의 핵심 경제발전 분야에 대한 당의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한 조직적 기반을 마련함.
- ◎ 중국정부는 ‘안정 최우선, 안정 속 성장’의 거시정책 기초를 기반으로 ‘5% 내외’의 보수적인 경제성장률 목표를 발표함.
  - ‘5% 내외’의 경제성장률 목표는 최근 5년(2018~22년)간 중국경제가 직면한 다양한 경제 불확실성 속에서 달성한 평균 경제성장률(5.2%)을 기반으로 시진핑 3기의 안정적인 경제성과를 확보하기 위해 제시된 수치로 해석됨.
  - 중국정부는 확장적 정책기조를 유지할 계획으로, 재정적자율과 중앙예산 내 투자 등 재정 지원 규모를 전년대비 확대하였으며, 실물경제 지원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선별된 분야에 집중적으로 유동성을 공급할 계획임.
  - 이번 양회에서는 ‘발전과 안보의 균형’을 강조한 점이 특징인데, 이는 중국정부가 미국의 견제에 대응하기 위한 과학기술 자립, 공급망 안정, 신형거국체제 구축(반도체) 등 경제안보 전략을 적극 추진하겠다는 의미로 평가됨.
- ◎ 한국은 중국의 거시경제 정책 변화와 시진핑 3기 조직·인사 개편의 영향을 모니터링하고, 국익에 기반한 한·중 경제관계 변화를 선제적으로 분석하여 이를 반영한 중장기 대응전략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2023년 양회를 통해 본 시진핑 집권 3기 경제운영 전망과 시사점

- 시진핑 3기 정부가 2023년 거시경제 기조를 ‘경제안정’과 ‘안정 속 성장’에 중점을 둔 것은 높아지는 대외 불확실성에 대응하여 내수경기에 중점을 두어 경제 정상화를 도모하겠다는 것으로 해석되며, 이러한 중국의 대내외적 전략 변화에 따라 한국의 대중 협력관계 개선이 필요함.
- 이번 양회에서 중국정부가 당면한 경제분야 도전과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문제지향적’ 조직 개편을 감행하면서 과학기술, 금융, 디지털(데이터) 등 중국 경제발전 핵심 영역에 대한 중국 공산당의 영향력이 강화되었다는 점에서 새로운 ‘당-국가체제’ 속에서 중국 경제정책의 강도와 깊이 변화에 대한 모니터링이 필요함.
- 중국은 국내경제 내실화와 더불어 무역·외국인투자·해외투자를 중심으로 하는 대외개방을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다자무역체제와 글로벌 거버넌스 참여로 확대되는 중국의 글로벌 영향력에 대응하여 한국은 국익을 고려한 원칙 기반으로 중국과의 협력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



# EU ‘그린딜 산업계획’ 후속정책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

**장영욱** 세계지역연구센터 유럽팀장 (yojang@kiep.go.kr, Tel: 044-414-1221)  
**조성훈** 경제안보전략실 경제안보팀 부연구위원 (scho@kiep.go.kr, 044-414-1437)  
**오태현** 세계지역연구센터 유럽팀 선임연구원 (asroc101@kiep.go.kr, Tel: 044-414-1159)  
**이현진** 세계지역연구센터 유럽팀 선임연구원 (hjeanlee@kiep.go.kr, Tel: 044-414-1226)  
**김초롱** 세계지역연구센터 유럽팀 연구원 (crkim@kiep.go.kr, Tel: 044-414-1124)

◎ 2023년 3월 EU 집행위원회는 한시적 보조금 규제 완화, 「기후중립산업법(Net-Zero Industry Act)」, 「핵심원자재법(Critical Raw Materials Act)」 등의 ‘그린딜 산업계획’ 후속정책을 발표함.

- EU는 친환경 전략산업에 대하여 각종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EU 그린딜의 기후중립 목표 달성을 앞당기고 미국, 중국 등의 차별적 친환경 보조금에 대응하여 EU 역내 산업을 보호하고 공급망 리스크를 최소화하고자 함.

◎ ‘그린딜 산업계획’ 후속정책의 주요 내용과 특징은 다음과 같음.

- [한시적 보조금 규제 완화] ‘한시적 위기 및 전환 프레임워크’를 신설하고 ‘일괄적용 면제 규정’을 개정함으로써 친환경 산업 관련 보조금 규제를 완화하고 지원 대상 및 한도를 상향 조정하였으며, 역외 이전 희망 기업을 역내에 유치하기 위해 ‘매칭 보조금’을 제공함.

- [기후중립산업법] 재생에너지, 배터리 기술 등 8개 ‘기후중립 전략기술’의 EU 역내 제조역량을 2030년까지 연간 수요의 40%로 증대하기로 했으며, 이를 위해 규제 간소화, 인력 및 연구개발 지원, 정부조달 친환경기준 강화 등의 방안을 제시함.

- [핵심원자재법] 16종 전략원자재의 역내 채굴(10%), 가공(40%), 재활용(15%) 비중 목표를 설정하고, 단일 국가에 대한 수입비중을 65% 이하로 제한하였으며, 이를 위해 허가절차 간소화, 자원 접근성 개선, 공급망 관리, 국제협력 등의 방안을 제시함.

◎ ‘그린딜 산업계획’ 후속정책의 영향은 EU가 시행하고 있는 다른 대외경제정책과 함께 종합적으로 파악해야 하며, 국내 기업에 대한 기회요인과 도전요인을 식별하여 대응할 필요가 있음.

- ‘그린딜 산업계획’의 차별적 요소는 비교적 제한적인 것으로 판단되나, 역외보조금규정, 탄소국경조정제도 등 EU에서 시행하고 있는 다른 대외경제정책과 결합하였을 때의 파급효과를 종합적으로 파악하며 대응해야 함.

## EU '그린딜 산업계획' 후속정책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

- 후속정책에 제시된 보조금, 규제 완화, 교육훈련 지원 등의 혜택은 EU 역내에 진출해 있는 한국 친환경 기업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므로 기회요인으로 작용함.
- 단 입법 논의 과정에서 한국기업에 불리한 방향으로 법안이 수정되지 않도록 정부·기업 입장에서 공식 의견개진이 필요하며, 핵심원자재 클럽 가입, 한·EU 전략 파트너십 수립 등 국제협력에 적극 참여해야 함.





##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 재집권 이후 이스라엘의 정세 변화와 시사점

이지은 세계지역연구센터 아프리카중동팀 전문연구원 (jinlee22@kiep.go.kr, 044-414-1096)

- ◎ 2022년 11월 7일 시행된 제25대 이스라엘 총선 결과 베냐민 네타냐후(Benjamin Netanyahu)를 지지하는 정당들이 얻은 의석수가 의회 과반을 차지하면서 네타냐후 총리가 1년 6개월 만에 재집권에 성공함.

  - 전 연립정부 지지 진영 내 분열과 네타냐후 총리의 극우 세력 결집 성공을 기반으로 집권한 이번 정부는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극우 성향을 띠는 평가를 받음.
- ◎ 신정부 출범 이후 여권 주도로 추진되고 있는 강경한 팔레스타인 정책과 사법개혁으로 인해 치안 불안정, 시위 발생 등 이스라엘 정세가 불안해지고 있음.

  - 신정부는 이스라엘 정착촌 합법화, 팔레스타인인에 대한 차별적 조치 등 이전 정권보다 강경한 팔레스타인 정책을 추진할 뿐 아니라 팔레스타인과의 물리적 충돌에 대한 강경 대응을 내세우면서 역내 긴장이 점차 고조되고 있음.
  - 이스라엘 여권이 사법부의 독립성 약화를 골자로 하는 사법개혁을 강행하자 이에 대한 국민들의 반발과 우려가 대규모 시위를 통해 표출되고 있음.
- ◎ 네타냐후 총리가 국내 정치적 현상 유지를 위해 노력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이스라엘 첨단기술 산업의 단기적 위축과 함께 미국 및 역내 아랍 국가들과 이스라엘 간 관계 경색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됨.

  - 정세 불안정으로 인한 투자환경 악화로 이미 이스라엘 내에서 자본유출 및 외국인투자 철회가 일어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이스라엘의 핵심 산업인 첨단기술 산업이 단기적으로 위축될 가능성이 있음.
  - 미국뿐만 아니라 UAE를 비롯한 역내 아랍 국가들은 이스라엘-팔레스타인 갈등이 심화됨에 따라 이스라엘과의 우호 관계 유지에 부담을 느낄 것으로 전망됨.
  - 이스라엘의 내부적 변화가 한-이스라엘 관계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는 않겠지만, 기술 및 투자 협력 추진에 있어서는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상황을 예의주시해야 할 것임.



## 미국의 대중 반도체 제조시설 수출통제에 따른 중국의 장비 수입 변화 분석

**김혁중** 세계지역연구센터 미주팀 부연구위원 (hjkim@kiep.go.kr, 044-414-1166)

**오종혁** 세계지역연구센터 중국경제통상팀 전문연구원 (ojh@kiep.go.kr, 044-414-1286)

**권혁주** 세계지역연구센터 미주팀 전문연구원 (hjkwon@kiep.go.kr, 044-414-1086)

**정유원** 세계지역연구센터 미주팀 연구원 (uwonj@kiep.go.kr, 044-414-1046)

### ◎ 미국은 중국 내 특정 반도체 제조시설(로직반도체 16/14nm 이하, NAND 128단 이상, DRAM 18nm 이하)에 대한 수출통제 조치를 시행함(2022. 10. 7).

- 해당 조치를 통해 중국 내 특정 반도체 제조시설에서 미국산 장비를 활용하기 어려워졌으며, 미국은 중국 내 다국적 기업(삼성전자, SK하이닉스, TSMC 등)에 대해서는 수출통제를 1년간 유예함.
- 본고에서는 수출통제 전('22년 1~9월)과 후('22년 10월~'23년 2월) 중국의 월평균 반도체 제조장비 수입 실적을 비교해 미국의 반도체 수출통제가 중국의 반도체 전(前)공정 장비 수입에 미친 영향을 확인하고자 함.

### ◎ 수출통제 후 중국의 반도체 제조장비 수입 규모가 큰 폭으로 감소함.

- 같은 기간 한국은 월평균 반도체 제조장비 수입액이 2% 상승했으나 중국은 22% 감소했으며, 반도체 업황 악화 상황을 고려하더라도 중국의 장비 수입액이 수출통제 후 눈에 띄게 줄었다고 볼 수 있음.
- 거의 모든 종류의 전(前)공정 장비(CMP/열처리/증착(CVD, PVD 등)/노광/식각/이온주입)의 월평균 수입 감소율이 같은 기간 한국보다 크며, 특히 PVD/식각/이온주입 장비 수입 감소가 두드러짐.
- 열처리, PVD, 이온주입 장비의 경우 일본산 장비가 미국산 장비를 대체하고 있으며, 한국에서 주로 수출하는 CVD 장비는 수출통제 후 오히려 중국 수입시장 내 점유율이 하락함.

### ◎ 반도체 제조시설이 위치한 중국 주요 지역에서 반도체 수입이 큰 폭으로 감소했으며, 미국산 장비의 점유율도 하락함.

- 대부분의 지역에서 수출통제 후 월평균 반도체 수입액이 큰 폭으로 감소했고, 특히 CXMT가 위치한 안휘성의 월평균 수입액 감소율(-80%)이 두드러짐.
- 예외로 후베이성과 산시성은 월평균 반도체 수입액이 수출통제 후 증가했으나, YMTC가 있는 후베이성은 미국/싱가포르산(미국 장비사의 제조시설) 장비 점유율이 이미 낮은 수준에서 더 하락했고, 삼성전자가 위치한 산시성은 수출통제 유예 기간이 적용되어 직접적인 수출통제의 영향을 받지 않고 있음.



## 2023년 나이지리아 대통령 선거 및 지방선거 결과와 신정부 정책 전망

**정민지** 세계지역연구센터 아프리카중동팀 전문연구원 (mjjeong@kiep.go.kr, 044-414-1225)

**박규태** 세계지역연구센터 아프리카중동팀 연구원 (ktpark@kiep.go.kr, 044-414-1293)

- ◎ 2023년 나이지리아 대선에서 집권 여당인 범진보의회당(APC)의 볼라 티누부(Bola Tinubu)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되어 5월 말 취임 예정이며, 지방선거에서도 여당이 가장 많은 지역에서 승리함.

  - 티누부 당선인은 36.6%의 득표율로 승리했으며, 인민민주당(PDP)의 아티쿠 아부바카르 (Atiku Abubakar)는 29.1%, 노동당(LP)의 피터 오비(Peter Obi)는 25.4%를 득표함.
  - 이전 나이지리아 대선은 APC와 PDP 간 양자 대결 구도를 보여왔으나, 이번 대선에서는 LP의 오비 후보가 청년층에게 큰 인기를 얻으면서 민주주의 실시 이래 최초로 삼파전 구도가 형성됨.
  - 지방선거에서는 APC가 16개 주에서 승리했으며, PDP는 10개 주, LP는 1개 주에서 승리하는 데 그침.
- ◎ 여당에서 신임 대통령이 당선됨에 따라 티누부 신정부의 경제정책 방향은 부하리 현정부의 정책기조를 대부분 유지할 것으로 보이며, 이전 정부에 비해 디지털 경제 및 스포츠·엔터테인먼트 산업 부문 수요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됨.

  - 티누부 당선인은 기존 부하리 정부의 나이지리아 국가개발계획(NDP: National Development Plans 2021-2025) 핵심 분야인 농업, 석유 및 가스, 교육, 보건의료 등을 중점 과제로 선정함.
  - 부하리 정부 NDP에서 핵심 분야로 선정되지 않았던 디지털 경제와 스포츠·엔터테인먼트 산업이 티누부 신정부에서 중점 과제로 선정됨에 따라 해당 분야의 수요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됨.
- ◎ 나이지리아 신정부의 수요를 반영하여 한-나이지리아 경제협력을 ICT 및 콘텐츠 산업 분야로도 확대할 필요가 있으며, 석유산업 부문에서도 협력 기회가 증가할 것으로 보임.

  - 디지털 경제 및 ICT 부문에서는 디지털 역량 강화, 블록체인 기술의 금융 부문 적용, 브로드밴드 설비 개선 등의 부문에서 협력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2023년 나이지리아 대통령 선거 및 지방선거 결과와 신정부 정책 전망

- 엔터테인먼트 산업 측면에서는 콘텐츠 제작 지원 및 산업 기반 조성 측면에서 협력을 고려해볼 수 있으며, 한국 콘텐츠에 대한 현지의 관심이 높은 만큼 관련 부문 수출 확대를 모색해 볼 수 있음.
- 나이지리아 신정부의 석유·가스 인프라 개선 및 생산량 확대에 대한 수요가 높음에 따라, 원유생산·저장 시설 건설, 노후 설비 교체, 천연가스 수출 터미널 건설, 정유기술 제휴 측면에서도 우리 기업의 현지 진출 기회를 찾을 수 있을 것임.



# 중동 주요 국부펀드의 최근 투자 동향 및 시사점

손성현 세계지역연구센터 아프리카중동팀 전문연구원 (shson@kiep.go.kr, 044-414-1266)

◎ 외환보유액과 별도로 분리되어 상대적으로 장기 및 고수익을 추구하기 위해 운용하는 기금인 국부펀드는 산업 발전, 정치적 이익 확보 등 다양한 목적을 위해 운용되고 있음.

- 중동 국가들이 석유 및 천연가스 수출, 각종 세금 등에서 발생한 재정수지 흑자를 바탕으로 운용하고 있는 국부펀드의 2022년 자산 및 투자 규모 모두 증가하였음.
- 특히 석유 및 천연가스 수출이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큰 GCC(Gulf Cooperation Council) 국가들은 경제 다각화 및 산업 육성을 포함한 장기 경제 비전과 소프트파워 증대와 같은 전략적 목적을 달성하고자 국부펀드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음.

◎ 사우디아라비아와 UAE의 국부펀드를 중심으로 기업 지분 인수, 벤처캐피탈 및 사모펀드 등을 통한 스타트업 투자 외에도 다양한 협정 체결이 이루어지고 있음.

- 중동 국부펀드는 설립 목적에 따라 상이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고 있으며, 최근 자산 규모 증대 또는 펀드 합병과 함께 일부 펀드는 투명성 및 ESG 개선에 나서고 있음.
- 2018~22년 금액 기준으로는 ADIA와 QIA가, 건수 기준으로는 MIC와 PIF가 중동 국부펀드 중 가장 많은 투자를 하였고, 이들의 주요 투자 지역은 미국 및 EU, 투자 형태는 상장 및 비상장 주식, 투자 부문은 임의소비재, 부동산, IT였음.
- 경제개발과 관련해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PIF와 MIC는 기업 인수 및 벤처캐피탈, 사모펀드 등을 통한 첨단기술 관련 기업 및 스타트업 등에 투자를 늘리고 있음.
- 최근 PIF와 MIC를 주축으로 한 중동 국부펀드는 게임, 바이오 등과 관련한 우리 기업의 지분을 인수하고 정상 회담 기간에 우리 정부 및 기업과 투자 및 협력 MOU도 체결하였음.

◎ 중동 국부펀드별로 상이한 운용 전략을 분석하여 스타트업 투자를 위한 공동 펀드 조성, 에너지 전환 중심의 합작 인프라 참여, 현지 산업 및 인적자원 개발에 기여할 수 있는 맞춤형 진출 전략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높은 기술력을 확보한 중소기업과 스타트업 등에 대한 자금 지원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중동 국부펀드와 공동 기금 조성 방안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음.

## 중동 주요 국부펀드의 최근 투자 동향 및 시사점

- 우리 기업, 국부펀드 또는 인프라 펀드가 중동 국부펀드와 함께 현지의 신재생에너지 및 수소 관련 인프라 투자에 공동 참여하거나 제3국 공동 진출도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우리 기업의 현지 진출을 통한 청년 일자리 창출, 인적자원개발과 연계한 상생 모델을 제시한다면 국부펀드의 투자 유치 가능성을 높일 수 있을 것임.



# ‘디지털 중국’ 추진전략의 주요 내용과 평가

오종혁 세계지역연구센터 중국경제통상팀 전문연구원 (ojh@kiep.go.kr, Tel: 044-414-1286)

- ◎ 2023년 2월 27일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와 국무원 공동으로 국가 디지털 전략 마스터플랜에 해당하는 ‘디지털 중국 건설규획’을 공개함.
  - 중국정부는 ‘디지털 중국’이 디지털 시대의 중국식 현대화를 주도하는 전략이며, 새로운 국가 경쟁의 우위를 점할 수 있는 기반임을 강조하고 있음.
- ◎ 이 규획에서는 2035년까지 중국의 디지털 강국 도약을 위한 중장기 발전방향과 △디지털 인프라 강화를 통한 데이터 순환 △디지털 전환 촉진 △핵심 기술 국산화를 위한 데이터 활용과 사이버 보안 강화 △국내외 거버넌스 기반 강화에 대한 세부 추진방향을 제시함.
  - 데이터센터 투자 확대 등 디지털 인프라 핵심 기반 강화와 국가 통합 데이터 관리 시스템 구축 등을 추진하고, 디지털 핵심 산업 육성 및 경제·사회 분야의 디지털 전환을 촉진함.
  - 반도체 등 핵심 기술 개발의 난관을 극복하고자 신형거국체제를 구축하고, 신뢰할 수 있고 통제 가능한 디지털 보안장벽 구축을 추진하며, 디지털 영역의 국제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다자간 협력 채널 참여 확대를 모색함.
  - ‘디지털 중국’ 전략은 중앙사이버보안 및 정보화위원회와 국가데이터국을 중심으로 추진될 예정이며, 향후 민간 참여와 더불어 공공부문의 디지털 역량 수준 제고, 디지털 중국 관련 행사를 추진할 예정임.
- ◎ 디지털 중국 전략 실현과 미중 전략 경쟁에서의 우위 확보를 위해 향후 디지털 경제에 대한 투자 확대 및 반도체 제조·후공정 기술 국산화에 적극 나설 것으로 보이며, 국가데이터국 설립을 통해 중앙정부 차원에서 데이터 관리감독을 강화할 전망이다.
  - 중국은 매년 폭증하는 데이터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강력한 연산능력을 갖춘 서버 인프라 확충이 필요하므로, 향후 ‘동수서산’ 프로젝트 투자에 적극 나설 전망이다.
  - 다만 미국의 대중 첨단 반도체 장비 수출제한 등의 조치로 인해 중국이 반도체 제조기술과 장비 국산화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이며, 첨단 패키징 공정기술 개발을 통한 칩 성능 개선 방안을 모색할 것으로 보임.
  - 향후 중국정부는 국가데이터국 설립을 통해 데이터의 통합적 관리를 실시하고, 표준·규범을 제정하여 데이터 개발과 활용을 촉진할 것으로 보임.



## ‘디지털 중국’ 추진전략의 주요 내용과 평가

- 디지털 중국 추진전략이 본격화됨에 따른 시장 기회와 위기 요인이 상존하는바, 관련 사항에 대한 모니터링이 필요함.





# 중국 LFP 배터리 공급망 분석 및 시사점

최재희 세계지역연구센터 중국지역전략팀 전문연구원 (jhchoi@kiep.go.kr, Tel: 044-414-1098)

- ◎ 최근 글로벌 완성차 업체들의 LFP 배터리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는 가운데, 가까운 미래에는 LFP 배터리의 글로벌 시장점유율이 삼원계 배터리를 역전할 가능성도 대두됨.
  - 글로벌 전기차 보급 속도가 빨라지면서 완성차 업체들은 전기차 대중화를 위한 보급형 모델을 출시하기 위해 LFP 배터리 탑재를 적극 추진하고 있음.
  - LFP 배터리에 미온적이던 한국 배터리 3사도 최근 LFP 개발 및 상용화에 착수하였고, 우리 정부도 LFP 연구개발에 대한 자금지원 계획을 발표함.
- ◎ 글로벌 LFP 배터리 중 95% 이상을 생산하고 있는 중국의 공급망을 분석하는 것이 LFP 배터리 공급망 전체를 파악하는 데 유효함.
  - 중국은 업스트림 단위에서 탄산리튬과 인산철 전구체의 대부분을 자국 내에서 조달하고 있지만 최근 탄산리튬 수입량이 증가하고 있으며, 인산철 전구체의 핵심 원료인 인광석은 정부가 생산을 통제하고 있음.
  - 미드스트림 단위의 핵심인 양극재의 출하량이 급증하고 있으며, 생산 물량의 대부분을 중국 내에서 소화하고 있음.
  - 2021년부터 중국 전기차의 절반 이상에 LFP 배터리가 탑재되면서 LFP 배터리의 생산 및 판매량이 급증하고 있으며, 주요 공급사인 CATL과 BYD가 중국시장의 80% 이상을 점유함.
  - 중국 배터리 업체들은 중국 내외에서 직접 개발, 지분 매수, 공급계약 등을 통해 원재료를 확보하고 있으며, 업스트림 단위에서부터 수직계열화를 이루어 강력한 가격경쟁력을 갖추.
- ◎ LFP 배터리 시장은 중국 내수시장을 중심으로 급성장하였으나, 향후 글로벌 수요도 지속 증가함에 따라 우리 배터리 기업과의 경합이 심화될 수 있음.
  - 중국은 LFP 기술혁신 및 생산능력 확대를 통해 모빌리티, ESS, 전기선박 등 분야에서 급성장하고 있는 배터리 수요에 적극 대응하고 있어 중국 업체들의 약진이 예상됨.
  - 공급망 수직계열화로 가격경쟁력을 갖춘 중국 업체들과 이제 막 LFP 배터리 사업에 착수한 우리 기업의 경쟁은 쉽지 않을 전망이며, 특히 LFP 공급망 구축과정에서 중국기업과의 자원 확보 경쟁에도 대비해야 함.

## 중국 LFP 배터리 공급망 분석 및 시사점

- ◎ IRA 등 중국산 광물·부품에 대한 미국의 규제조치 때문에 중국기업의 북미시장 진출은 제한적일 수 있으나, 중국이 우회 진출을 적극 모색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함.
  - IRA의 ‘해외 우려 집단(FEOC)’에 중국이 포함될 가능성이 높아 중국기업의 북미시장 활동에 불확실성이 상존하며, 배터리 원자재의 대중국 의존도가 높은 우리 기업들도 이에 대비하여 공급망 다변화가 시급함.



# 한-아세안 연대구상(KASI)의 주요 내용과 대아세안 협력 전망

**최인아** 세계지역연구센터 동남아대양주팀장 (iachoi@kiep.go.kr, 044-414-1049)

**장한별** 세계지역연구센터 동남아대양주팀 연구원 (hanbyeolj@kiep.go.kr, 044-414-1245)

- ◎ 최근 외교부는 인도-태평양 전략하에 새로운 대아세안 정책인 ‘한-아세안 연대구상(KASI: Korea-ASEAN Solidarity Initiative)’의 이행계획을 발표함.

  - KASI는 한-아세안 중점 협력 분야와 한국판 인태 전략의 3대 비전인 ‘자유·평화·번영’을 연계한 8대 중점 추진과제로 구성됨(① 한-아세안 관계 격상 및 아세안 회원국과의 관계 강화 ② 아세안 주도 메커니즘 내 한-아세안 협력 제고 ③ 한-아세안 포괄안보 협력 확대 ④ 한-아세안 전략적 공조 활성화 ⑤ 한-아세안 공동 번영과 발전을 위한 미래 분야 협력 확대 ⑥ 지역적·국제적 도전과제 대응을 위한 한-아세안 협력 ⑦ 미래 번영을 이끄는 차세대 교류 증진 ⑧ 아세안 관련 협력기금 등 각종 협력재원 확충).
- ◎ KASI는 최근 한국이 지속해온 아세안 중시정책 기조를 재확인시켰을 뿐만 아니라, 아세안과의 정치·안보 협력을 대폭 강화함으로써 기존의 대아세안 정책을 보완한 것으로 평가됨.

  - 과거 한국의 대아세안 정책이 아세안과의 교역·투자 증진에 치중되었던 데 반해, KASI는 정치·안보 협력을 전면에 내세웠다는 점에서 기존 정책과 차별됨.
  - 정치·안보 협력이 두드러진 것은 KASI가 한국 인태 전략의 세부 지역 전략으로 추진되는 만큼, 인태 지역 규칙 기반 질서와 역내 평화 증진에 대한 한국의 역할을 제고하는 데 중점을 두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됨.
  - KASI는 EAS, ARF, ADMM-Plus 등 아세안 주도 메커니즘 활성화와 함께 ‘인도태평양에 대한 아세안의 관점(AOIP)’ 주류화 지원을 강조하고 있는데, 이는 아세안의 당면 현안인 ‘아세안 중심성 강화’에 기여한다는 점에서 아세안 측의 호응을 이끌어낼 것으로 전망됨.
- ◎ 경제협력 부문에서는 경제안보 파트너로서 아세안의 가치를 제고하고, 배터리, 전기차 등 한-아세안 간 전략적 이해가 맞아 있는 미래 산업 협력을 강조한 것이 주목됨.

  - 인도네시아, 베트남, 필리핀, 말레이시아 등 자원 보유국과의 핵심광물 공급망 협력 강화가 예상되며, 한국과 아세안 주요국이 전기차 산업 육성을 도모하고 있는 만큼 전기차가 한-아세안 경제협력 고도화를 이끌 주요 산업으로 부상할 전망이다.

## 한-아세안 연대구상(KASI)의 주요 내용과 대아세안 협력 전망

- ◎ KASI는 그간 미진했다고 평가받아온 한-아세안 정치·안보 협력을 강화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가 예상되나, 정치·안보 협력이 빠른 가시적 성과를 보기 어렵다는 점은 정책의 성과 도출·확산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음.
  - 아세안의 핵심 현안인 해양안보 협력을 점진적으로 확대해나가는 한편, 한국이 경쟁력을 가진 정보통신 기반의 포괄안보 대응역량 강화와 사이버안보 분야의 협력을 주도해나갈 필요가 있음.
- ◎ KASI는 인태 지역 평화·번영에 대한 한국의 역할을 가늠하는 이정표가 될 것으로 보이며, KASI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정치·안보, 경제, 사회·문화를 아우르는 범부처 차원의 협력이 강화될 필요가 있음.



# USMCA 자동차 원산지 규정 관련 분쟁 판정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

김민성 무역통상실 무역투자정책팀 전문연구원 (mskim411@kiep.go.kr, 044-414-1113)

- ◎ USMCA 발효 후 승용차 및 경형 트럭의 역내가치포함비율(RVC) 계산 시 핵심부품의 생산에 사용된 비원산지 재료 가치의 역내산 인정 여부에 대해 멕시코와 미국 간에 견해 차이가 발생함.
  - 멕시코와 캐나다는 자동차의 RVC 산정 시 핵심부품이 원산지 지위를 획득하면 해당 부품에 사용된 비원산지 재료를 포함하여 핵심부품의 가치를 100% 역내산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입장임.
  - 반면 미국은 핵심부품에 대한 RVC 산정은 자동차의 RVC 산정에 고려될 수 없으므로 자동차의 RVC 산정 시 핵심부품이 원산지 지위를 획득하더라도 핵심부품에 사용된 비원산지 재료의 가치는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함.
- ◎ '21년 8월 멕시코와 캐나다는 본 사안에 대해 미국에 공식적인 협의를 요청하였으나 합의 도출에 실패하였고, '22년 1월 패널 설치를 요청하여 '23년 1월 최종 패널보고서가 공개됨.
- ◎ 패널은 최종 보고서에서 미국의 원산지 규정에 대한 해석과 적용이 USMCA의 관련 규정을 위반하였다고 판결하여 멕시코와 캐나다가 승소함.
  - 패널은 핵심부품이 원산지 지위를 획득하면 자동차의 RVC 계산 시 비원산지 재료를 포함하더라도 해당 핵심부품의 가치를 100% 역내산으로 인정해 주어야 한다고 판결함.
  - 패널은 이에 대한 근거로 '원산지(originating)'라는 용어는 USMCA 협정 전체에서 일관되게 동일한 의미로 해석되어야 하며, 미국의 주장대로 해석하기 위해서는 조항의 적용에 대한 예외를 명시하거나 '원산지'와는 완전히 다른 용어의 사용이 필요하다고 설명함.
  - 또한 패널은 미국이 자동차 관련 원산지 규정 이행 시기를 추가적으로 2년 유예받기 위해 충족해야 하는 요건을 넘어선 의무를 요구하여 관련 협정을 위반하였다고 판결함.
- ◎ 이번 패널 판결로 인해 미국은 USMCA의 목표와 성과가 저해될 수 있다는 우려를 나타낸 반면 자동차 제조사 및 부품업체들은 역외산 부품 조달을 보다 신속성 있게 운용할 수 있게 되었으며 USMCA 특혜관세 혜택을 받는 것이 보다 용이해질 것으로 전망됨.

## USMCA 자동차 원산지 규정 관련 분쟁 판정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

- 미국은 패널 판정 결과에 따라 유연한 원산지 규정이 적용될 경우 자동차의 RVC가 상당히 부풀려지고, 캐나다와 멕시코에서 조립 공장을 운영하는 다국적 자동차 회사들은 북미산 부품의 투자와 생산 대신 제3국으로부터 주요 부품을 지속적으로 수입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함.
- 캐나다와 멕시코에서 승용차 및 경형 트럭을 생산하고 판매를 위해 미국으로 수출입하는 자동차 생산업체들은 자동차의 RVC 요건을 충족하는 것이 보다 용이해짐.
- 또한 핵심부품들을 하나의 부품으로 간주할 수 있게 되어 저부가가치 핵심부품의 역외산 사용이 가능해짐에 따라 기업의 편의 증가와 생산 비용 감소가 예상됨.
- 미국은 향후 가능한 해결책을 찾기 위해 캐나다 및 멕시코와 협력할 것이라는 입장을 발표하였으나 최근 미국 내 자국 우선주의가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향후 이행 과정에 대한 면밀한 모니터링이 필요함.



# 일본 기시다 정부의 저출산 대책과 시사점

이형근 세계지역연구센터 일본동아시아팀 선임연구원 (hklee@kiep.go.kr, 044-414-1069)

- ◎ 2022년 일본의 출생아 수가 80만 명 이하의 사상 최소치로 감소함에 따라, 기시다 정부는 향후 3년간 집중 추진하고자 하는 어린이·육아 정책인 ‘차원이 다른 저출산 대책’을 2023년 3월 말에 발표
  - 2022년 기준 일본의 출생아 수는 전년대비 5.1% 감소한 79만 9,728명으로 추정되는데, 이는 정부가 80만 명 이하로 될 것으로 예상한 ‘2030년’보다 8년이나 앞당겨진 것임.
  - 일본정부는 2030년까지가 저출산 추세를 반전시킬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인식하고, 향후 3년간을 집중 대응기간으로 설정하여 ‘어린이·육아 지원 가속화 플랜’을 추진하기로 함.
  
- ◎ 기시다 정부의 저출산 대책은 크게 네 가지 분야로 구성
  - 첫째, 육아 관련 경제적 지원의 강화 차원에서 아동수당 확충, 출산·의료비·고등교육비 부담 경감, 육아세대에 대한 주택지원 강화 등을 추진할 방침임.
  - 둘째, 모든 어린이·육아 세대를 대상으로 서비스 확충 차원에서 임신 시기부터의 지속적인 지원 확충, 유아교육·보육의 질적 향상, 보육 확충, 새로운 방과후 어린이종합플랜 실시 등을 추진할 계획임.
  - 셋째, 맞벌이·공동육아 추진을 위해 남성 육아휴직 사용 촉진, 육아 부모 지원을 위한 근무 방식의 유연화 추진, 근무방식과 육아의 양립 지원 등으로 ‘일하는 방식’을 개혁할 방침임.
  - 넷째, 위의 세 가지 부문에서 추진하는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중앙정부뿐만 아니라 지자체, 기업 등 다양한 곳에서 어린이·육아 친화적인 사회 구축을 위한 의식 개혁을 추진할 계획임.
  - 이번 기시다 정부의 저출산 대책에 대해서는 정책 목표의 차별화, 정책 대상의 확대 등에 대한 긍정적 평가와 함께 기존 저출산 대책의 연장선상에 있어 ‘차원이 다르지 않다’는 평가가 혼재함.
  
- ◎ 우리 정부는 저출산 대책과 관련한 정책 과제별 구체적인 성과지표 설정, 한·일 정부간 대화를 통해 공통 과제인 저출산 문제의 해결방안 모색 등을 추진할 필요

## 일본 기시다 정부의 저출산 대책과 시사점

- 최근에 발표된 저출산 정책에 구체적인 정책 목표 및 달성시기가 제시된 경우도 있지만 일부 그렇지 않은 항목도 있으므로, 향후 분야별 세부계획 수립 시 이를 점검·반영할 필요가 있음.
- 향후 한·일 양국의 정부간 대화가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양국이 공통의 정책 과제인 저출산 문제에 대해 이전의 정책 추진 경험을 공유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등 정책협력의 확대 추진이 요구됨.





# 크레딧 스위스 위기 이후 유럽 은행 리스크 평가

오태현 세계지역연구센터 유럽팀 선임연구원 (asroc101@kiep.go.kr, Tel: 044-414-1159)

- ◎ 스위스 제2위 은행인 크레딧 스위스(CS)의 위기가 글로벌 은행망을 통해 유럽으로 확산될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평가됨.
  - 크레딧 스위스의 위기는 구조적인 원인보다 개별 은행 차원의 문제(투자손실, 불법거래에 따른 비용발생,뱅크런)에서 기인한 바가 크기 때문임.
  - UBS가 크레딧 스위스를 합병하는 과정에서 논란이 된 AT1 완전상각의 경우, ‘계약서상 은행과 채권자가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다’고 스위스금융시장감독청이 해석함에 따라 추가적인 리스크 요인은 제한적인 것으로 판단됨.
  
- ◎ 다양한 지표에서 나타나는 EU 은행부문의 리스크는 크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
  - [부실채권]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EU 집행위원회는 은행부문의 건전성 강화를 추진해왔으며, 이에 따라 2022년 기준 유럽 주요 은행들의 부실채권(NPLs: Non-Performing Loans) 비율은 1.8%임.
  - [자본 및 유동성 요건] 유럽 은행들의 자기자본비율이 꾸준히 개선되면서 2022년 12월 기준 핵심자기자본비율(CET1 ratio)은 15.3%, 유동성커버리지비율(LCR)은 165%를 기록하는 등 위기 시 대응에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남.
  - [유럽 은행주 지수] Stoxx Europe 600 Banks 지수는 미국 실리콘밸리은행의 파산으로 3월 초 급락했으며, 이후 크레딧 스위스 사태로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으나 이후 완만한 상승세를 기록하며 충격에서 회복되는 추세임.
  
- ◎ EU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은행부문의 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수단(부실채권 관리, 은행동맹으로서 단일은행감독기구 및 단일은행정리기구 시행)을 운영하고 있음.
  - 위기 발발 시 EU 차원의 대응 매뉴얼을 구축함으로써 위기가 EU 역내로 확산되는 것을 신속히 차단하고 충격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함.
  
- ◎ 유럽중앙은행의 고금리 기조에 따른 은행의 수익성 악화 가능성 및 모바일 뱅크런과 같은 새로운 유동성 위기요인이 상존하는 만큼 유럽 은행들의 시장 신뢰 확보 노력 및 EU 집행위원회의 새로운 은행 규제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됨.



# 라오스 경제 위기 가능성 진단 및 시사점

**정재완** 세계지역연구센터 동남아대양주팀 선임연구원 (jwcheong@kiep.go.kr, 044-414-1051)  
**김소은** 세계지역연구센터 동남아대양주팀 연구원 (kse@kiep.go.kr, 044-414-1335)

- ◎ 라오스는 2021년 하반기 이후 소비자물가 급등, 깎(kip)화 가치 하락, 대외채무 증가에 따라 경제 불확실성이 고조되고 급기야는 ‘채무불이행(Default)’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데, 이는 라오스 경제의 구조적 취약성에 코로나19 팬데믹과 러-우 전쟁의 영향이 더해진 결과로 분석됨.
  - 경제 불안 고조의 근본적인 원인은 △내륙국 특성상 심해항구 미보유 △물류 인프라 열악 △제조업 미발달 △소비재와 자본재 대부분 수입에 크게 의존 △만성적인 외환 부족 등이 꼽힘.
  - 특히 코로나19 팬데믹과 러-우 전쟁으로 발생한 △국내외 물류 및 공급망 붕괴 △생산 및 소비 둔화 △관광 산업 붕괴 △글로벌 고물가 지속과 주요국의 금리 인상 러시 등이 직접적인 배경이 되고 있음.
- ◎ 최근 라오스와 주요 파트너국 간 채무 재조정 협상, 중국과의 경제교류 확대와 외국인 관광객 유입, 라오스의 교역 및 투자환경 개선 등으로 미루어 볼 때 단기적으로 라오스의 디폴트 상황 발생 확률은 낮은 것으로 분석됨.
  - 최근 라오스 정부는 주요국과 함께 공적대외채무에 대한 양자 간 재조정 협상을 추진하는 가운데 채무 증가의 근본 원인인 국유기업에 대한 개혁을 본격 추진하고 있음.
  - 라오스 경제는 중국 리오프닝에 따른 중-라 경제교류 및 외국인 관광객 유입 확대, 활발한 전류 수출, 정부의 수출진흥책 추진 등을 바탕으로 성장세가 2023년부터 다소 회복될 것으로 전망됨.
  - 다만 경제 불확실성을 불식하고 디폴트 가능성을 확실히 낮추기 위해서는 단기적으로 △물가안정 △통화가치 안정 △채무 재조정 성공 등이 필요하고 장기적으로는 재정 건전성 확보, 채무관리 강화, 금융 안정성 확보, 비즈니스 환경 개선 등이 추가로 요구됨.
- ◎ 라오스는 한국과의 경제협력 규모는 다소 작지만 주요 경제협력 파트너이자 전략적 경제안보 파트너가 될 가능성이 있는 국가이므로 라오스 경제의 상황 변화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더 나아가 경제 변화에 따른 시나리오별 대응 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음.

## 라오스 경제 위기 가능성 진단 및 시사점

- 라오스는 한국의 전통적인 ODA 중점협력 대상국이자 현 정부가 강조하는 인태전략 및 한·아세안 연대구상(KASI)의 당사국이기에 한국의 중요한 협력 파트너로서 의미가 있음.
- 따라서 양국은 지속가능한 협력을 위해 △개발협력전략 재점검 △글로벌 공급망(GSC) 측면에서의 라오스 활용 방안(특히 희토류 포함) 수립 △기업 차원에서 라오스 물류 인프라 발전 가능성에 따른 중장기 투자전략 재수립 등이 요구됨.



# 2023년 세계경제 전망(업데이트)

총괄책임 안성배 국제거시금융실장 (sungbae@kiep.go.kr, Tel: 044-414-1190)

- ◎ [세계경제] KIEP는 2023년 세계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종전 전망치 대비 0.2%p 상향 조정하여 2.6%로 전망하고, 2024년 세계경제 성장률은 3.0%로 전망

  - 2023년 하반기 세계경제는 ‘더딘 복원을 향한 협소한 통로’를 지날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금융불안과 신용긴축에 따른 장기침체 경로 △이슈별 이합집산과 글로벌 정책공조 약화 △공급망 다각화와 내수 전환 과정에서의 중국 리스크 등 하방압력이 상방요인보다 높음.
- ◎ [선진국] 주요 선진국에서는 여전히 높은 핵심물가와 고금리에 따른 신용위축이 경제활동 둔화를 상당 기간 야기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후 회복세도 매우 더디게 진행될 것으로 전망

  - 미국은 견조한 고용시장과 정점을 지난 물가상승률 등의 긍정적 요인이 있으나 △금융권의 타이트한 신용 여건 △여전히 높은 수준에서 유지될 정책금리 △경직적인 서비스물가 수준 △부진한 투자 및 산업활동 등으로 하반기부터 경기가 둔화되어 연간 1.2%의 성장률을 기록할 전망이다.
  - 유로 지역과 영국은 여전히 높은 근원물가와 유럽중앙은행 및 영란은행의 매파적 대응으로 구매력 회복이 늦어지면서 각각 연간 0.8%와 -0.2%를 기록할 전망이다.
  - 일본은 정부지원책에 따라 물가가 안정되고 임금인상을 기반으로 소비 회복세가 나타나며, 중국발 인바운드 관광 회복도 기대되는 등 내수부문을 중심으로 연간 1.4% 성장할 것으로 전망됨.
- ◎ [신흥국] 신흥국들은 선진국 대비 높은 물가 수준과 대외수요의 둔화에 따라 성장률 전망이 종전 대비 낮아졌으며, 중국은 리오프닝 및 정책 효과로 내수 중심의 성장이 전망되어 상향 조정

  - 중국은 리오프닝에 따른 경제활동 재개, 정부의 내수 활성화 정책, 2022년 3.0%의 낮은 성장률 대비 기저효과 등으로 정부가 제시한 ‘5% 내외’ 경제성장 목표보다 높은 연간 5.5%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됨.
  - 인도는 대외수요 감소, 글로벌 가치사슬 불안 고조, 원자재 가격 변동과 물가상승 등에 따른 국내경기 둔화 및 경상수지 적자 확대가 해외직접투자 유입 호조를 상쇄시켜 연간 5.2%를 기록할 전망이다.



## 2023년 세계경제 전망(업데이트)

- 아세안 5개국은 중국의 리오프닝(re-opening)에 따른 상방요인과 글로벌 경제성장 둔화 및 고물가 부담이 상충된 방향으로 작용하면서 연간 4.7% 성장할 것으로 전망됨.
- 러시아는 2022년 -2.1% 역성장에 대한 기저효과 및 제한적인 수준에서의 소비와 순수출의 기여로 양(+)의 성장을 기록하며 연간 0.5%를 나타낼 전망이다.
- 브라질은 중국의 제로코로나 정책 종료에 따른 수혜를 입을 것으로 보이지만, 높은 금리에 따른 경제활동 위축과 미국, 유럽 시장의 부진으로 인해 연간 1.0% 성장할 것으로 전망함.



# 최근 한국의 대(對)아세안 교역·투자 분석과 시사점

이재호 세계지역연구센터 동남아대양주팀 선임연구원 (ihlee@kiep.go.kr, 044-414-1134)

- ◎ 한국의 대외 교역은 팬데믹에도 불구하고 지속 증가해 2022년 사상 최대 규모를 달성했으나, 2022년 1/4분기부터 시작된 무역수지 악화에 대해서는 대응책 마련이 필요한 상황임.
  - 최대 교역대상국으로서 중국의 입지는 변하지 않았으나 수년간 대중국 무역수지가 지속 감소해 최근 적자로 전환되었으며, 그에 반해 2대 교역대상지인 아세안과의 교역 및 무역수지는 2022년 사상 최대규모를 기록해 무역수지 적자 해소를 위한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음.
- ◎ 한국의 對아세안 교역은 2022년 2/4분기부터 글로벌 수요 감소 및 생산 네트워크 위축으로 인해 수출 감소가 관찰됨.
  - 한국의 對아세안 수출은 생산 네트워크에 활용되는 자본재(설비), 중간재(부품 및 원자재)의 비중이 약 95%에 달하며, 소비재 및 1차 상품의 비중은 5% 내외에 불과해 생산 네트워크의 활성화에 따라 등락하는 경향이 있음.
  - 對아세안 수출 감소는 아세안 국가 중 최대 교역대상국인 베트남과의 생산 네트워크 부진에서 비롯된 경향이 크며, 최근 글로벌 수요 위축의 영향으로 베트남의 최대 수출품목인 휴대전화 생산에 사용되는 전자집적회로, 평판디스플레이 등 주요 중간재 수출이 큰 폭으로 감소함.
- ◎ 최근 한국의 對아세안 직접투자에서는 아세안 국가 중 최대 투자대상국이었던 베트남에 대한 투자 감소 및 다변화 현상이 발견됨.
  -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아세안 국가 중 최대 투자대상국이었던 베트남에 대한 투자가 감소해 싱가포르에 최대 투자대상국 지위를 내어주었으며, 인도네시아에 대한 투자 비중은 점차 증가함.
  - 업종별로는 최대 투자업종인 제조업의 對베트남 투자 감소 및 對인도네시아 신규 투자 증가가 관찰됨.
- ◎ 향후 글로벌 수요 회복 및 신규 투자 프로젝트 진행으로 생산 네트워크가 활성화될 경우 對아세안 수출이 재반등할 것으로 예상되며, 아세안 맞춤형 수출전략을 구축하기 위한 산·관·학 정책 연구 및 현업의 의견을 신속히 수용할 수 있는 대화 채널 구축이 필요함.



## 최근 한국의 대(對)아세안 교역·투자 분석과 시사점

- 수출전략회의에서 수출 확대를 위한 기본방향 및 분야별 실행계획이 제시되었으나, 이에 더해 對아세안 협력안인 ‘한-아세안 연대구상’과 아세안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전략을 추가할 필요가 있음.



# 최저개발국(LDCs) 현황과 지역별 협력 방안: GNI, HAI, EVI 지수를 중심으로

김소은 세계지역연구센터 동남아대양주팀 연구원 (kse@kiep.go.kr, 044-414-1335)  
 정민지 세계지역연구센터 아프리카중동팀 전문연구원 (mjjeong@kiep.go.kr, 044-414-1225)  
 남유진 세계지역연구센터 인도남아시아팀 연구원 (yoojin@kiep.go.kr, 044-414-1330)

- ◎ 2023년 3월 9일 제5차 유엔 최저개발국 회의 개최 이후 국제사회는 급변하는 대외환경속 최저개발국의 경제 및 사회적 자립 달성 정도와 협력 방안에 대해 주목하기 시작함.
  - 금번 제5차 최저개발국 회의에서는 ‘2011-2020 이스탄불 행동계획(IPoA)’을 평가하고, 새로 채택된 ‘2022-2031 도하 행동계획(DPoA)’에 대한 국제사회의 달성 의지를 확인함.
  - 도하 행동계획은 △빈곤퇴치 및 역량 강화 △혁신을 통한 SDGs 달성 △최저개발국의 구조적 변화, △최저개발국의 지역 통합 강화 △기후변화, 환경파괴, 코로나19로부터의 회복 및 미래충격에 대한 회복력 구축 △글로벌 파트너십 재활성화 등 6가지 의제를 강조함.
  - 우리나라는 글로벌 중추 국가로서 공적개발원조(ODA) 규모 확대 및 국가별 맞춤 수요 지원 등을 강조하며, 최저개발국 지원에 대한 공동 목표인 도하 행동계획을 채택해 최저개발국의 △빈곤 △불평등 △경제위기 극복을 지원할 것임을 표명함.
- ◎ UN이 제시한 최저개발국의 경제·사회적 자립 수준 척도인 △1인당 국민소득(GNI) △인간 자산지수(HAI) △경제·환경 취약성 지수(EVI)를 바탕으로 한국의 중점협력국 중 최저개발국 10개국을 대상으로 분석함.
  - 1인당 GNI의 경우, 해당국의 기초 소득을 분석하였으며, 건강 및 교육 지수를 반영한 HAI는 아동 및 청소년의 교육 및 건강에 대한 기초적 환경을 알 수 있으며, EVI는 지리적 환경 요소와 기후변화에 따른 경제적 영향의 척도를 가늠할 수 있어 의미가 있음.
  - 다만 해당 지표는 한국의 중점협력국 중 최저개발국 10개를 대상으로 해당국의 기초적 자립 수준의 정도 및 현황을 판단하기 위한 분석이므로 분석 방법과 범위가 제한적일 수 있으나, 향후 더 넓은 범위에서 일반협력국과의 협력 방향 제시를 위한 기초적인 자료로 사용할 수 있음.
- ◎ 분석 결과, 대부분 국가가 지리 및 기후 요소가 반영된 EVI보다 정책 및 국제사회의 지원으로 극복이 가능한 HAI 달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남아시아 지역이 가장 높은 진척도를 보이고, 그다음으로는 동남아시아, 아프리카 순으로 분석됨.



## 최저개발국(LDCs) 현황과 지역별 협력 방안: GNI, HAI, EVI 지수를 중심으로

- [아시아 5개국] 아시아에서 HAI 기준 가장 높은 진척도를 보인 국가는 방글라데시이며, 이후 네팔, 캄보디아, 미얀마, 라오스 순으로 나타났으며, 대부분 국가가 일정 수준을 달성해 최저 개발국 지위 졸업 이후의 전환 등에 대한 정책적 준비를 하고 있음.
- [아프리카 5개국] 아프리카 또한 HAI 부문에서 르완다, 세네갈, 탄자니아, 우간다, 에티오피아 순으로 나타났으나, 아프리카의 경우 HAI와 EVI 달성의 격차가 매우 큰 것이 특징이므로 이에 대한 협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 ◎ 이에 따라 지수 달성 수준이 높고 최저개발국 지위 졸업의 주요 요건을 충족한 아시아 5개국에 대하여 중장기적 관점에서 ODA뿐만 아니라 해당국의 경제 전환 이후의 무역 및 투자에 대한 경제협력 방안을 제시할 필요가 있으며, 아프리카 5개국은 국가 간 HAI 및 EVI 편차가 큰 상황이므로 국가별로 차별화된 접근이 필요함.



# 인도 주가지수 상승의 주요 배경 및 시사점

김도연 세계지역연구센터 인도남아시아팀 전문연구원 (dykim@kiep.go.kr, 044-414-1257)

◎ 코로나19로 인한 대내외 충격에도 불구하고 인도의 대표적 주가지수인 Sensex가 2020~22년 괄목할 만한 상승을 기록하여 인도 주식시장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음.

- 2020년 3월 23일 29,981포인트까지 하락했던 인도의 Sensex 지수는 반등세를 보이며 2021년 10월 사상 최고치인 60,000포인트를 돌파했고, 미국, 중국과 같은 주요국의 주가지수 성과를 크게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 인도 주가지수가 급등한 배경으로는 개인 투자자 증가, 인도 정부의 투자 활성화 및 성장 중심의 경제정책, 인도 거시 경제 안정성 등으로 분석됨.

- 코로나19 팬데믹 동안 인도의 개인 투자자들이 많이 증가한 것이 주가 상승의 가장 큰 요인으로 분석됨.

- 대면활동이 제한된 환경 속에서 인도의 개인 투자자들은 대체 수입원을 모색하였고, 전자 신원 인증 시스템(e-KYC), 통합 지불 인터페이스(UPI)와 같은 인도 금융시스템의 빠른 디지털화는 개인이 주식시장에 참여하는 것을 확대하는 동력이 되었음.

- 최근 3년간 5,000만 개가 넘는 주식계좌(Demat account)가 생성되었으며, 인도 개인 투자자로부터 유입된 투자금은 약 2조 8,000억 루피로 같은 기간 외국인 투자금의 3배 규모임.

- 인도 정부가 시행한 세제 혜택, IPO 장려, 외국인 주식 보유 한도 확대 같은 투자 활성화 정책뿐만 아니라, 법인세 인하, 대규모 인프라 예산 할당과 같은 성장 정책도 주식시장이 활성화되는 배경으로 작용함.

- 인도는 코로나19 감소세를 바탕으로 2022년 민간소비가 회복하면서 주요국 중 가장 높은 경제성장률을 기록하였으며, 인도 기업의 매출액도 높은 성장세를 보였음.

◎ 인도의 경제성장률과 금융 부문의 성장 잠재력을 고려하면 인도의 주식시장은 향후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되며, 투자국으로서 인도가 더욱 주목받을 것으로 전망됨.

- 인도 정부는 2020년 4월 국제금융서비스센터국(IFSCA)을 설립했으며, 2022년 7월 인도 최초의 국제금거래소인 IIBX를 출범시키는 등 인도를 세계적인 금융 서비스 중심지로 성장시키고자 함.

## 인도 주가지수 상승의 주요 배경 및 시사점

- 아다니 그룹 이슈에도 불구하고 2023년 1~2월 Sensex는 평균 59,256포인트를 유지하며 안정적인 추세를 보였고, 인도의 투자자들은 최근 주식뿐만 아니라 보험 등 새로운 금융 상품에 대한 투자도 확대하는 추세임.
- 이에 우리 정부는 인도와 자본시장 정보 공유, 공동행사 개최 등을 통한 대인도 협력을 확대할 필요가 있으며, 인도에 진출하고자 하는 우리 기업은 인도 주식시장에 참여하여 자금을 확보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음.



# 2023년 제48차 G7 정상회의 주요 논의 결과와 시사점

김승현 세계지역연구센터 일본동아시아팀 전문연구원 (shkim@kiep.go.kr, 044-414-1035)

## ◎ [개요] 2023년 5월 19~21일 제48차 G7 정상회의가 일본 히로시마에서 개최됨.

- 참여국 정상들은 회의의 성과로 공동성명과 5개 분야별 개별성명을 발표함.
- 우리나라는 초청국 자격으로 ‘복합위기 대응(식량, 개발, 보건, 젠더)’, ‘지속가능한 세계를 위한 공동의 노력(기후변화·에너지·환경)’, ‘평화와 번영(지역정세, 국제질서 유지)’ 등 총 3개 세션의 확대정상회의에 참석함.

## ◎ [주요 논의 결과] 제48차 정상회의에서는 ① 우크라이나 문제 ② 외교·안보 ③ 경제안보 ④ 디지털 ⑤ 기후변화·에너지·환경 ⑥ 복합위기 대응(식량, 보건, 개발, 젠더) 등 다양한 이슈들이 논의됨.

- [우크라이나 문제] 7개국 정상들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의지를 표명하면서, 제재 대상의 확대, 러시아를 지원하는 제3국에 대한 경고 및 러시아산 다이아몬드 거래 제한 등 신규 대러 제재를 결정함.
- [외교·안보] 중국에 책임 있는 행동을 촉구함과 동시에 대만, 인도·태평양 및 비핵화 등 지역 정세·안보문제에 대해 논의하고, 핵군축에 관한 별도의 성명을 채택함.
- [경제안보] 공급망 및 기간 인프라 강화, 비시장적 정책 및 관행·경제적 외압에 대한 대응 강화(공동 대응을 위한 조정 플랫폼 설치), 중요·신흥 기술의 적절한 관리 등에 대해 논의하고, 경제안보에 관한 공동성명을 채택함.
- [디지털] 생성형 AI 거버넌스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2023년 중 생성형 AI의 이용, 규제 등에 관한 가이드라인 제정 등 결과물을 산출하기로 합의함.
- [기후변화·에너지·환경] 수송부문 이산화탄소 배출량 50% 절감, 석탄화력발전의 단계적 폐지 등 신규 목표들을 도입하는 데 합의함.
- [복합위기 대응]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으로 인해 영향을 받고 있는 신흥국에 식량 등 인도적 지원을 지속하고, 보편적 의료보장을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는 등 국제보건을 위해 지속적으로 투자하는 데 합의함. 또한 중·저소득 국가의 인프라 구축을 위해 지속적으로 투자하기로 함.

## 2023년 제48차 G7 정상회의 주요 논의 결과와 시사점

- ◎ [평가] 이번 정상회의를 통해 참여국들은 중국에 대해 견제 의도를 드러내고 결속을 전면에 내세웠으나, 기후변화·디지털 등 일부 이슈들에 대해서는 입장차가 분명히 나타남. 또한 일본은 중국과의 외교적 문제를 공동성명에 명시하는 등 일부 성과를 거두었으나, 이로 인해 향후 중국과의 관계에 있어서 갈등의 소지가 이전보다 커짐.
- ◎ [시사점] 우리나라는 생성형 AI와 관련하여 G7의 논의 동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석탄화력발전 부문 등에서 향후 좀 더 진전된 이행계획 등을 요구받을 가능성에 대비해야 하며, 중국의 경제적 강압에 대한 G7의 공동 대응 및 핵심광물 공동개발 추진 등의 이행 여부를 주시할 필요가 있음.



## 중국의 ‘글로벌 발전 이니셔티브’ 추진 현황과 전망

김홍원 세계지역연구센터 중국지역전략팀 전문연구원 (hwkim@kiep.go.kr, 044-414-1278)

- ◎ 시진핑 주석이 2021년 ‘글로벌 발전 이니셔티브’를 제창한 이래 중국은 UN의 SDGs 달성을 목표로 개도국과의 대외협력을 적극 추진하고 있음.

  - 중국은 ‘글로벌 발전 이니셔티브’를 추진하여 글로벌 거버넌스가 약화된 현 국면을 타개하고 개도국의 개발문제와 전 세계적 도전과제를 해결하는 데 기여하고자 함.
  - 약 2년 동안 60여 개국이 중국 주도로 발족한 ‘글로벌 발전 이니셔티브’ 소그룹에 가입함으로써 다자협의체의 기본틀을 갖추어가고 있음.
- ◎ 중국은 △빈곤감소 △식량안보 △방역·백신을 중심으로 아프리카와 동남아시아 등지에서 개발협력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기존에 추진해온 동반자관계의 외연을 확장하면서 SDGs 데이터 무상제공 사업을 전개하고 있음.

  - 중국은 자국의 SDGs 달성 중 전 세계 목표 달성에 기여한 바가 크고 현저한 성과를 거둔 빈곤감소 협력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음.
  - ‘글로벌 발전 이니셔티브’ 추진을 계기로 중국은 빈곤감소, 기후변화·녹색성장 등 각 협력분야별로 추진해온 동반자관계의 외연 확대를 꾀하고 있음.
  - 중국은 전 세계 SDGs 달성에 필요한 데이터 수집을 위해 2021년 인공위성을 발사하고 데이터 연구센터를 설립해 전 세계에 관련 데이터를 무상으로 제공하고 있으며, 이는 EU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임.
- ◎ 중국의 ‘글로벌 발전 이니셔티브’에 대해 서구권과 개도국은 엇갈린 반응을 보이고 있으며, 최근 추진하고 있는 ‘글로벌 발전 이니셔티브’의 주요 사업을 검토한 결과 기존 대외협력 전략인 일대일로보다 ‘글로벌 공공재 제공’에 초점을 맞추어 개발협력을 추진할 가능성이 높아 보임.

  - 서구권은 전 세계 SDGs 달성을 위해 중국이 개발협력을 추진하는 것은 환영하지만, 글로벌 개발협력 논의를 주도하려는 것에 대해서는 부정적으로 평가함.
  - 팬데믹과 러-우 전쟁에 따른 경제적 여파를 극복하려는 개도국, 특히 동남아시아는 ‘글로벌 발전 이니셔티브’를 통해 자국의 개발재원 부족문제를 해결하고 중국과의 경제협력을 촉진하기를 기대함.



# 파키스탄의 복합위기와 시사점

김경훈 세계지역연구센터 인도남아시아팀 부연구위원 (kimpolecon@kiep.go.kr, 044-414-1263)

## ◎ 파키스탄 내 경제 및 정치 상황이 악화되면서 디폴트 가능성이 다시 제기됨.

- 지난 2년간 달러화 대비 파키스탄 루피화 환율이 큰 폭으로 상승하여, 2022년 4월 디폴트를 겪은 스리랑카의 환율 상승 폭을 넘어서고 있음.
- 주요 신용평가사들은 파키스탄을 ‘매우 높은 위험’ 국가로 분류하는 가운데, 경제 및 정치 불안이 심화되자 신용등급의 추가 하향 조정 가능성을 시사함.

## ◎ 파키스탄 내 불안의 배경에는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5대 위기가 있음.

- [채무 위기] IMF가 구제금융 요구조건에 대한 파키스탄 정부의 불이행을 이유로 2022년 8월 이후 자금지원을 중단한 가운데 파키스탄의 외환보유고는 수입액 1개월 치 규모로 감소함.
- [생활고 위기] 2023년 4월 36%에 달하는 물가상승률과 생필품 확보의 어려움으로 인해 파키스탄 국민의 생활 수준이 급격히 악화되고 있음.
- [기후 위기] 파키스탄이 2022년 3~6월 기록적인 열파(熱波)와 6~10월 사상 최악의 홍수로 인한 피해로부터 아직 회복하지 못한 가운데, 기후 관련 피해가 추가 발생할 가능성이 제기됨.
- [정치 위기] 2022년 4월 불신임 투표 가결 이후 총리직에서 물러난 임란 칸 전 총리가 대규모 시위를 진두지휘하며 지지기반을 강화한 상황에서, 2023년 10월로 예정된 총선을 앞둔 5월 칸 전 총리가 긴급 체포되자 정정 불안이 급격히 심화됨.
- [외교 위기] 국제질서가 파편화(fragmentation)되고 있는 가운데 미국을 비롯한 서방국가들이 노골적으로 친중국, 반인도 성향인 파키스탄과 거리를 두고 있음.

## ◎ 5대 위기로 인해 당분간 파키스탄의 디폴트 가능성이 높은 수준을 지속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한국정부는 관련 동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음.

- 한국정부는 파키스탄의 지정학적 중요성과 현지 교민의 안위를 고려해 △IMF 구제금융 △반정부 시위 △대규모 홍수 및 피해 복구 동향을 지속적으로 파악하고, 향후 전개될 다양한 상황별 대응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러-우 전쟁 이후 우리나라의 대중동 원유 수입 비중 변화와 시사점

유광호 세계지역연구센터 아프리카중동팀 전문연구원 (khryou@kiep.go.kr, 044-414-1165)

- ◎ 최근 미주, 아시아 등지로 다변화되었던 우리나라의 원유도입선이 2022년 다시 중동지역에 집중되는 양상을 보였으며, 2023년 1/4분기에도 같은 추세가 지속됨.
  - 우리나라의 대중동 원유 수입 비중은 2016년 85.9%에서 2021년 59.8%로 5년간 약 26.1%p 감소하였으나, 러-우 전쟁 여파로 2022년 한 해 동안 전년대비 7.6%p 증가하며 67.4%를 기록함.
  - 2023년 1/4분기에도 70.2%를 기록하며 대중동 의존도 심화 추세가 지속됨.
- ◎ 우리나라의 대중동 원유 수입 비중이 다시 증가하는 요인으로는 우리 정유사의 안정적 공급처 선호 기조, 중동산 원유의 접근성 확대, 미국산 원유에 대한 글로벌 경쟁 심화 등을 꼽을 수 있음.
  - [안정적 공급처 선호 기조] 러-우 전쟁에 따른 글로벌 에너지 수급 불안과 러시아산 원유 도입 중단 등의 요인이 맞물리며 우리 정유사의 안정적 공급처 선호 기조가 강화됨.
  - [중동산 원유의 접근성 확대] 중동의 산유량이 전반적으로 확대되었을 뿐 아니라 중동의 주요 원유 수출 시장이었던 중국, 인도의 대중동 원유 도입량이 감소하면서 상대적으로 중동산 원유의 접근성이 확대됨.
  - [미국산 원유에 대한 글로벌 경쟁 심화] 전 세계 최대 원유 생산국이자 최근 우리 정유사가 도입선 다변화 대상으로 주목해온 미국을 대체 수입처로 고려할 수 있으나, EU 내 미국산 원유 수요 확대에 도입 경쟁이 심화됨.
- ◎ 수입원의 특정 지역 편중은 우리나라의 에너지 안보뿐 아니라 향후 우리 정유사의 가격 협상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대중동 원유 비중이 더 확대되지 않도록 관리하고 수입처 개척 노력을 지속할 필요가 있음.
  - 중동은 전통적으로 정세가 불안한 지역일 뿐 아니라 2010년대 후반부터 호르무즈 해협을 중심으로 유전시설 공격 등 역내 국가간 갈등이 여러 차례 발생하면서 최근 대중동 원유 도입 차질에 대한 우려가 증폭된 상황임.
  - 원유 수입원이 특정 지역에 편중될 경우 해당 지역 지정학적 리스크 발발에 따른 가격 변동에 취약해질 수 있으며, 향후 우리 정유사의 가격 협상력도 저하될 가능성이 있음.





## 러-우 전쟁 이후 우리나라의 대중동 원유 수입 비중 변화와 시사점

- ◎ 원유 도입 감소가 중동 국가와의 협력 축소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한-중동 양자간 지속가능하고 호혜적인 관계를 형성하기 위해 협력부문을 다각화하는 노력을 강화해야 할 것임.



# 한-태평양도서국 정상회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

**최인아** 세계지역연구센터 동남아대양주팀장 (iachoi@kiep.go.kr, 044-414-1049)

**장한별** 세계지역연구센터 동남아대양주팀 연구원 (hanbyeolj@kiep.go.kr, 044-414-1245)

- ◎ 2023년 5월 29~30일 한-태평양도서국 간 첫 정상회의가 서울에서 개최되었음.
- ◎ 한국과 태평양도서국 정상들은 ‘회복력 있는 태평양의 자유, 평화, 번영을 위한 파트너십’을 위한 2023 정상선언을 발표하고, 한-태도국 간 미래 협력의 방향성과 구체적인 협력사업을 담은 행동계획을 발표함.
  - ‘자유, 평화, 번영의 태평양을 위한 행동계획’은 2022년 PIF 정상회의에서 공식 채택된 ‘2050 푸른 태평양대륙 전략’과 연계하여, 3대 추진 분야(△회복력 증진 △역량 강화 △연결성 재활성화)로 구성됨.
  - [회복력 증진] 한국은 △기후변화 대응 △해양·수산 협력 △친환경 에너지 △생물 다양성 △산림 협력 △온실가스 관리 전문가 양성 등 태도국의 기후 회복력 증진과 감염병 및 재난 회복력 강화 지원 계획을 밝힘.
  - [역량 강화] 한국은 2027년까지 태도국 ODA를 두 배 확대하고, 한국의 경제발전 경험을 바탕으로 △해양·수산자원 관리 △해양치안 △보건 위험 관리 △농업·지역개발·마을 자조 금융 등 태도국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할 다양한 역량 강화사업을 추진할 계획임.
  - [연결성 재활성화] 한국과 태도국은 장기적인 파트너십을 구축하기 위해 인적·물적·디지털 연결성을 증진하고, 인적·문화 교류 활성화 및 외교 인프라를 확충해나갈 것을 약속함.
    - 한국은 이번 정상회의를 계기로 그간 태도국 중 유일하게 비수교국이었던 니우에와 외교 관계를 수립하고, 태평양 지역 내 공관 추가 개설 계획을 밝힘.
- ◎ 아울러 윤석열 대통령은 태도국 10개국 정상과 개별 양자회담을 갖고, 한-태평양도서국포럼 (PIF) 간 다자협력을 넘어 국별 수요를 고려한 맞춤형 양자 협력을 추진하는 계기를 마련함.
- ◎ 우리 정부는 이번 정상회의를 통해 한국이 인도태평양 지역 평화와 번영에 책임 있는 기여를 할 것이라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한편, 기존의 한-태도국 간 협력을 한층 심화하는 기반을 조성함.

## 한-태평양도서국 정상회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

- 한국이 태도국을 한국판 인태 전략의 협력대상지로 선정함에 따라, 이번 정상회의는 한국의 인태 전략 추진 의지를 대외적으로 표방하는 계기가 되었음.
- 이번 한-태평양도서국 정상회의는 양측간 협력 비전을 명시한 정상선언과 구체적 사업을 포함한 행동계획을 도출했다는 점에서 한-태도국 협력 역사에 새로운 획을 긋는 전환점이 될 것으로 평가됨.

◎ 이번 정상회의가 일회성 성과로 끝나지 않기 위해서는 태도국에 대한 협력 의지를 지속적으로 표명할 필요가 있으며, 중장기적 차원에서 한-태도국 간 파트너십을 지속·강화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확충해나가야 함.



#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국제사회의 인도적 지원 동향과 시사점

**박차미** 국제개발협력센터 전략평가팀 전문연구원(chamipark@kiep.go.kr, 044-414-1217)

**윤혜민** 국제개발협력센터 정책분석팀 전문연구원(hmyoon@kiep.go.kr, 044-414-1478)

- ◎ 국제사회는 복합적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인도적 대합의, 인도적 지원-개발-평화 연계등의 논의를 지속하고, 인도적 지원 규모를 꾸준히 확대하고 있음.
  - 국제사회는 인도적 지원을 위한 자원 부족을 해소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고자 2016년 ‘인도적 대합의’를 채택하였으며, 2021년 우선순위를 재조정하여 양질의 자원 확보와 현지화에 주력하고 있음.
  - 인도적 지원과 개발협력 간 연계성을 제고하기 위한 논의도 지속되고 있으며, OECD DAC의 인도적 지원-개발-평화 넥서스에 관한 권고를 중심으로 구체적인 이행방안이 마련됨.
  - 국제사회의 인도적 지원 총규모는 2013년 145억 달러에서 2022년 402억 달러로 2.8배 증가하였으며,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식량안보, 보건, 보호, 코로나19 관련 지원이 증가함.
- ◎ 국제사회는 인도적 지원을 보다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방안으로 양질의 자원 동원 및 기여, 현지 중심의 대응, 다양한 파트너십 구축, 유관 분야와의 일관성 및 보완성 강화를 추구하고 있음.
  - 최대 공여국인 미국은 조기복구, 위험경감, 탄력성 회복에 중점을 둔 ER4 전략을 바탕으로 현지의 역량을 강화하여 인도적 지원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 접근을 취하고 있으며, NGO와의 협력을 확대하고 있음.
  - 선제적이고 예측 가능한 인도적 지원을 지향하는 독일은 다자기구, 적십자, NGO 등의 다양한 파트너와 함께 다목적 현금지원 확대기조에 따라 인도적 지원을 수행하고 있음.
  - 우리나라는 인도적 지원 규모가 점차 확대되고 수행 주체가 늘어남에 따라 지원 효과성을 제고하고 국내외 협력을 증진하기 위한 기본방향을 개정 인도적 전략에 명시함.
- ◎ 우리나라는 인도적 지원의 효과성과 책무성을 강화하기 위해 다양한 파트너십 구축, 현지 이해관계자 참여 확대, 선제적 지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인도적 지원 확대 기조 하에 우리 정부는 국내외 시민사회기관, 자선단체, 민간기관 등 다양한 주체와 파트너십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국제사회의 인도적 지원 동향과 시사점

- 지역 사회의 인도적 지원 수요를 명확히 반영하기 위해 수요조사, 프로그램 기획·모니터링·평가 시 현지 이해관계자 참여를 확대하는 접근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우리나라 인도적 지원은 긴급구호 성격이 강한바, 인도적 지원의 유연성과 예측성을 제고하고 위기의 근본적인 요인에 대응하는 보다 선제적인 지원을 지향하는 것이 바람직함.



# 대선 이후 튀르키예 경제 주요 현안 및 향후 전망

이철원 세계지역연구센터 유럽팀 선임연구원 (cwlee@kiep.go.kr, Tel: 044-414-1071)

- ◎ 2023년 5월에 치러진 튀르키예 총선 및 대선 투표 결과, 총선에서는 여당 연합이 승리하고 대선에서는 현 에르도안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함.
  - 5월 14일 총선에서 에르도안 대통령 소속의 정의개발당(AKP)과 여당 연합인 민족주의행동당(MHP)이 총 600석 가운데 과반인 317석을 확보함.
  - 5월 14일 치러진 대선 1차 투표에서 특정 후보가 50% 이상을 득표하지 못해 실시된 28일 결선 투표에서 현 대통령인 레제프 타이프 에르도안(Recep Tayyip Erdogan) 후보가 52.2%를 득표하며 재선에 성공함.
  
- ◎ 최근 튀르키예 경제는 고물가, 리라화 가치 하락, 성장률 둔화 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에 튀르키예 정부는 선거 전후로 다양한 경제정책을 통해 대응해왔음.
  - 2022년 11월 전년동월대비 84.4%를 기록한 튀르키예의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이후 다소 하락 안정화되었으나, 2023년 5월 기준 39.6%로 여전히 높은 물가상승률을 나타내고 있음.
  - 리라화의 가치는 2022년에 달러 대비 약 42.5% 하락하였으며, 고물가, 달러 강세 외에도 튀르키예 중앙은행(CBRT)의 금리인하 정책으로 인해 리라화 평가절하가 최근까지 계속됨.
  - 튀르키예 경제성장률은 팬데믹 이후 관광 수요, 내수 및 수출 회복으로 인해 2023년 1/4분기까지 높은 수준을 기록하였으나, 대선 이후 긴축정책으로 인한 경기 둔화가 예상됨.
  - 튀르키예 정부는 소매업체 가격 동결, 최저 임금 인상 등 고물가로 인한 민심 이반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였으며, 적극적인 물가 안정책으로 2023년 인플레이션이 안정기에 접어들었다고 밝힘.
  
- ◎ 에르도안 대통령의 재집권으로 국제정세에 영향을 미치는 외교부문에는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보이나,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고물가, 리라화 가치 하락 등 당면 과제 선결이 시급함.
  - 내수 진작, 투자 촉진 등을 통한 경제 성장을 목표로 하는 에르도안 대통령의 저금리 기초 정책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임.
  - 단 에르도안 대통령이 대선 승리 연설에서 ‘고물가가 국가의 가장 시급한 문제이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국제적으로 명성이 높은 경제 관료를 임명할 것’이라고 밝혀 소폭의 정책적 변화 가능성이 존재함.



## 대선 이후 튀르키예 경제 주요 현안 및 향후 전망

- 물가상승 압력, 리라화 가치 하락 등으로 인해 튀르키예가 장기적으로 저금리 기조를 유지하기는 어려워 보이며, 세계경제 환경, 원자재 가격, 국내경제 상황 등에 따라 정책기조의 변동 가능성도 상존함.



# 중국의 반도체 국산화 추진 현황과 시사점

오종혁 세계지역연구센터 중국경제통상팀 전문연구원 (ojh@kiep.go.kr, Tel: 044-414-1286)

- ◎ 미국에 이어 네덜란드, 일본도 대(對)중국 반도체 장비 수출통제 조치에 나설 예정이며, 이에 반도체 장비의 해외 의존도가 높은 중국은 국산화를 통해 대응해나갈 것으로 보임.
- ◎ 중국정부는 경제적·산업적으로 중요한 반도체 산업을 2014년부터 국가전략화하고, 핵심반도체 기술과 장비에 대한 국산화를 추진해왔으며, 이를 위해 ① 소재, 장비, 부품 기업에 대한 반도체 산업기금 투자 확대 ② 반도체 기업의 커황반(科创板) 상장 지원 ③ 반도체와 소프트웨어 기업에 대한 세제혜택 등을 부여함.
  - 또한 중국은 반도체 국산화 과정에서 나타난 해외 인력에 대한 높은 의존도, 반도체 인력 수급문제 등을 해결하고자 산학 연계 강화를 추진하고 실무형 인재양성을 확대하고 있음.
- ◎ 2022년에 중국 반도체 장비 국산화율이 크게 제고되었으나, 첨단반도체 생산에 필수적인 노광장비의 국산화 수준은 높지 않은 편임.
  - 2022년 중국의 반도체 장비 국산화율은 35%로 전년대비 14%p 상승하였으며, 베이팡화창(Naura), 중웨이반도체(AMEC) 등이 정부 투자와 연구 지원 등을 통해 빠르게 기술력을 확보하면서 식각, 박막, 증착 등 공정 분야에서 국산화율을 크게 제고함.
  - 중국 유일의 노광장비 업체인 상하이 마이크로전자(SMEE)는 국산 DUV(ArF 90nm)를 개발하였으나 가장 최신의 ASML사 제품 대비 15년 정도의 기술격차를 보이고 있으며, 국산화율은 3% 수준에 불과함.
- ◎ 미국의 제재가 상대적으로 약한 반도체 설계 분야에 대한 중국의 투자가 늘어나고 있으며, 일부 중국기업의 첨단반도체 설계 경쟁력이 크게 높아짐.
  - 화웨이는 패키징, EUV, EDA 등 분야에서 특허를 출원하고 있고, 알리바바와 바이트댄스, 텐센트 등은 RISC-V 기반 AI 칩 설계에 착수하였으며, 바이렌은 고성능의 GPU 반도체 시제품을 공개한 바 있음.



## 중국의 반도체 국산화 추진 현황과 시사점

- ◎ 단기적으로 주요국의 수출통제 조치가 중국의 반도체 국산화에 영향을 주겠지만, 국유자본이 투입된 중점기업을 중심으로 28nm 노드 이상의 레거시(lagacy) 반도체 제조 기술과 노하우가 빠르게 축적되고 있어 중장기적으로 중국 반도체 장비 시장에서 로컬기업 비중이 더욱 높아질 전망이다.
  - 중국은 디지털 중국 전략 실현과 미국과의 AI 경쟁에서 우위 확보를 위해 첨단반도체가 필요한 상황으로, 칩렛(chiplet) 기술 등 첨단 패키징을 통한 칩 성능 향상과 우회 방법을 통해 첨단반도체를 확보할 것으로 보임.
  - 또한 중국은 첨단반도체 설계역량을 내재화하고, 다량의 특허 출원을 통해 기술 보호에 나선 것으로 예상되며, 전기차 등에 사용되는 차세대 전력 반도체(SiC, GaN)의 경쟁력 확대를 모색 중인바, 이에 대한 모니터링이 필요함.

